초고령화 시대, 농어촌·농어업 지속 발전을 위한 정책 포럼

- 청년 정착 촉진과 조합원 제도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 **일시 / 장소** : 2026. 9. 9.(수) 9:30 /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주　최** : 주철현 국회의원

□ **주　관** : 농협 미래전략연구소 · 수협 수산경제연구원

□ **후　원** : 농림축산식품부 · 해양수산부

□ **시간 계획 및 주요 내용**

시 간		내 용
09:30~09:40	10'	▷ **개회 및 인사말씀**
09:40~09:45	5'	▷ **기념촬영**
09:45~10:30	45'	▷ **주제발표** (1) **초고령화 시대, 농어촌 인구구조 변화와 정책 패러다임 전환** - 김미복 선임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 **청년농 영농 정착의 구조적 공백과 과제** - 전경미 부연구위원 (농협미래전략연구소) (3) **어업인 고령화에 따른 수협 조합원 감소 대응방안** - 박지훈 연구위원 (수협수산경제연구원)
10:30~10:35	5'	▷ **휴　　식**　※ 진행 상황에 따라 생략 가능
10:35~11:30	55'	▷ **종합토론** 【좌장】 **김한호** 명예교수 (서울대학교) 【패널】 **박혜민** 팀장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 **도윤정** 과장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엄청나** 정책위원장 (전국농민회총연맹) **주영대** 사무총장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장지훈** 대표 (솔온팜, 前음성군청년농업인4-H연합회장) **임종선** 부소장 (한국수산회 수산정책연구소)
11:30		▷ **폐　　회**

개 회 사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 여수시갑 국회의원 주철현입니다.

오늘 「초고령화 시대, 농어촌·농어업 지속 발전을 위한 정책 포럼」을 주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함께해 주신 김한호 서울대 명예교수님과 정부와 농수산업계, 현장 전문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귀중한 연구 결과를 발표해 주실 김미복 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님, 전경미 농협 미래전략연구소 연구위원님, 박지훈 수산경제연구원 연구위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포럼의 주제인 '초고령화 시대, 농어촌·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우리 농어촌이 당면한 가장 절박한 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농가와 어가의 고령화는 이미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지금과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농가 수가 현재 97만 호에서 2045년에는 40만 호 이하로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청년의 진입과 고령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은퇴·경영이양을 함께 뒷받침하는 세대교체가 해법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청년을 농어촌으로 유입하는 것을 넘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촘촘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주 철 현

동시에 기후위기와 에너지 비용 문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정부가 스마트팜을 청년농업인의 미래농업 모델로 적극 권장하고 있지만, 최근 여름철 이상고온으로 냉방 가동이 늘면서 청년농업인의 전기요금 등 냉방비 부담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팜을 확대하는 것과 함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낮추고,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경영 안전망을 마련해야 합니다.

수산업 역시 조합원 고령화와 감소에 대응해 조합원 자격 확대와 청년 조합원에 대한 혜택 강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농협과 수협은 단순한 협동조직을 넘어 농어업의 세대교체를 현장에서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이기 때문입니다.

국회 농해수위 위원으로서 오늘 포럼에서 제시되는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들의 제안이 정부 정책과 국회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논의가 농어촌에 청년이 돌아오고, 지속가능한 농어촌을 만드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9월 9일
국회의원 **주 철 현**

인 사 말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협중앙회 회장 강호동입니다.

「초고령화 시대, 농어촌 · 농어업 지속 발전을 위한 정책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주철현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포럼은 의원님의 현장 중심 의정 철학이 투영된 자리이며 농·수협이 공동으로 농어촌의 당면 과제를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아울러 오늘 포럼의 중지(衆智)를 모아 혜안(慧眼)을 제시하는 중책을 기꺼이 맡아주신 김한호 교수님과 발제자・토론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농어업인과 농어촌 현장의 모든 분들께도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농어촌은 큰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초고령화와 인구감소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농어업 현장의 인력 부족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농어촌의 인구가 줄어드는 문제가 아닙니다. 농어업 생산 기반이 약화되고 지역공동체가 흔들리는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누가 농어촌에서 살아갈 것인가?, 누가 농업과 어업의 미래를 이어갈 것인가?, 그리고 어떤 농어촌을 만들어 다음 세대에 물려줄 것인가?” 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통한 정책입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강 호 동

그런데, 그 답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청년 농어업인이 있어야 합니다. 청년이 농어촌에 들어오고, 농어업을 직업으로 선택하고, 농어촌에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사회에서 청년이 당당한 지역의 주체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농어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협동조합의 미래를 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제 위기에 강한 농어업,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농어촌, 그리고 다음 세대가 이어갈 수 있는 농어업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청년 농어업인 육성을 더욱 체계화하고, 농업과 어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어야 합니다. 또한, 청년들이 농협과 수협의 새로운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 생태계를 조성하고 관련 제도, 사업 등도 시대의 변화에 맞게 개선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에서도 청년 농어업인 육성을 농어업 인력 정책의 범주를 넘어 국가 식량안보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바라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협도 더욱 적극적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이 포럼에서 나온 소중한 연구와 제언이 정책으로 이어지고, 현장의 변화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9월 9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강 호 동**

인 사 말

안녕하십니까. 수협중앙회 회장 노동진입니다.

오늘 「초고령화 시대, 농어촌·농어업 지속 발전을 위한 정책 포럼」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논의의 장을 마련해 주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주철현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포럼을 함께 주관한 농협 미래전략연구소, 귀한 고견을 나누어 주실 발제자와 토론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농어촌은 유례없는 인구 절벽 앞에 서 있습니다. '10년 17만 명에 육박하던 어가인구는 '24년 8만 3,963명으로 절반 이하로 감소하였고, 어업인의 고령화율은 동기간 두 배 이상(34.3% → 67.0%)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농업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농가인구는 '10년 306만명에서 '24년 200만명으로 약 100만명 이상 감소하였고, 농업인의 고령화율은 동기간 약 27.9%p(41.8% → 69.7%) 이상 상승하였습니다.

이같은 농어업인의 감소는 조합원의 감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5년 수협 조합원은 14만 8,090명으로 10년 전보다 6.5% 감소하였고, 고령화율은 75.3%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농축협 조합원 역시 '24년 약 208만 명에서 '26년 2월 약 202만 명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더 이상 미래의 과제가 아니라 우리 앞에 닥친 현실이며, 협동조합의 기반과 농어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노 동 진

이를 위해 우리 수협은 평생을 바다에 헌신하고도 고령으로 자격을 잃는 어업인을 품는 길을 찾고 있습니다. 아울러 바다로 들어오려는 청년들이 정착하고 조합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바다에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어야 어촌이 살고, 어촌이 살아야 국민의 식탁이 지켜질 수 있습니다. 결국, 해법의 출발점은 '사람'에 있습니다.

농촌과 어촌이 안고 있는 고민은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는 농촌과 어촌이 한 몸처럼 움직이며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나눌 고견이 농어촌과 나아가 협동조합의 내일을 바꾸는 힘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가 국회와 정부, 학계와 현장의 지혜를 모아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만들어 내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수협중앙회도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온 의견을 통해 책임을 다하며, 지속 가능한 어촌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9월 9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노 동 진**

축 사

오늘 국회에서 「초고령화 시대, 농어촌 · 농어업 지속 발전을 위한 정책 포럼」이 개최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소중한 논의의 장을 마련해주신 주철현 국회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농협중앙회 미래전략연구소와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그리고 발표와 토론에 참여해 주신 전문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2024년 12월을 기점으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특히 농가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51.3%로 절반을 넘어선 만큼, 이제는 농어촌의 인구구조 변화에 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때입니다.

그 해법의 중심에는 청년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농촌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해 전문 농업경영인으로 성장할 때, 농촌의 활력 회복은 물론 농업의 지속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 미 령

정부는 청년들이 농촌에 첫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고 성장할 때까지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자 합니다. 정예 청년농업인재 1만 명 육성을 목표로 농지와 자금, 주거 등을 종합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예비농 역량강화 지원사업'을 도입해 영농과 경영 역량을 사전에 충분히 갖출 수 있도록 단계별 맞춤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년들이 농업 생산뿐만 아니라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창업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정책 대상과 지원 범위도 넓혀가고 있습니다. 농촌창업 경진대회를 통해 우수기업을 발굴·육성하는 한편, 창업가 간 교류와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럼에서는 청년농의 영농 정착 촉진과 더불어 농어촌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농·수협 조합원 제도 개선 방안 등 매우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현안들이 깊이 있게 논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과 학계, 정부와 관계 기관의 지혜가 모여 농어촌·농어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포럼 개최를 축하드리며,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승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2026년 9월 9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 미 령**

축 사

농어촌·농어업 지속 발전을 위한 포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행사를 마련해 주신 존경하는 주철현 의원님, 수협 수산경제연구원과 농협 미래전략연구소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촌과 농촌은 모습은 다르지만, 초고령화와 청년인구 감소, 일손 부족과 지역 소멸이라는 공통의 구조적 변화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촌의 초고령화는 단순한 인구 감소의 문제를 넘어 수산업의 생산기반과 지역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고령 어업인의 경험과 생산기반이 다음 세대로 원활하게 이어지고, 새로운 인력이 수산업에 진입하여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은 어촌의 미래를 위해 너무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청년들이 어촌으로 돌아오고, 어선과 양식장 등 생산기반을 통해 안정적으로 소득을 얻으며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진입부터 성장, 정착까지 꼼꼼한 제도 마련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해양수산부 장관
황 종 우

동시에 인구 감소와 일손 부족에도 수산업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어선어업의 현대화와 양식업의 스마트화를 통해 생산성을 향상하고, 주거, 복지 등 어촌의 정주환경을 함께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해양수산부도 이러한 요구에 발맞추어 청년과 신규 어업인의 진입 장벽을 낮추어 수산업의 세대 전환을 촉진하는 한편, 어촌이 지속가능한 삶터이자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수협에서도 청년 어업인이 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현장과 정부를 잇는 가교 역할을 수행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 포럼에서 제시되는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 여러분의 제안을 귀담아 듣고, 어촌·어업 정책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포럼 개최를 축하드리며,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9월 9일
해양수산부 장관 **황 종 우**

목 차

주제발표 1

초고령화 시대, 농어촌 인구구조 변화와 정책 패러다임 전환 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미복 선임연구위원

주제발표 2

청년농 영농 정착의 구조적 공백과 과제 17

농협미래전략연구소 전경미 부연구위원

주제발표 3

어업인 고령화에 따른 수협 조합원 감소 대응방안 35

수협수산경제연구원 박지훈 연구위원

종합토론

【좌장】 **김한호** 명예교수 (서울대학교) 53

【패널】 **박혜민** 팀장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

도윤정 과장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엄청나 정책위원장 (전국농민회총연맹)

주영대 사무총장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장지훈 대표 (솔온팜, 前음성군청년농업인4-H연합회장)

임종선 부소장 (한국수산회 수산정책연구소)

주제발표

1

초고령화 시대, 농어촌 인구구조 변화와 정책 패러다임 전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미복 선임연구위원

초고령화 시대,
농어촌 인구구조 변화와 정책 패러다임 전환

2026. 9.

KRE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미복

p.1

목 차
Contents

KRE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1. 초고령화 시대
: 인구구조와 전망
2. 농업농촌 영향
: 성장동력 약화/농촌 소멸
3. 정책패러다임 전환



p.2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KRE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초고령화 시대
– 인구구조와 전망

고령화 시대, 초고령화 농어촌

고령인구 비중 2.9%(1960) → 21.6%(2026) → 47.7%(2072), 노령화지수 6.9 → 222.7(2026)로 급등
중위연령은 19.0세(1960) → 47.3세(2026) → 63.4세(2072)로 급격히 상승 중

우리나라 인구구조는 1960년 유소년 42.3% · 고령인구 2.9%의 피라미드형에서, 2026년 고령인구 21.6%의 항아리형을 거쳐 2072년에는 고령인구 47.7%의 완벽한 역피라미드형으로 전환 전망



출처: 국가데이터처 인구구조상황판(https://kosis.kr/visual/populationKorea/PopulationDashBoardMain.do)

농어촌 인구구조 ① – 초고령화

농어촌 지역 발전은 산업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기반인데, 초고령화 등으로 회복탄력성이 크게 저하

농어촌 고령화율은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으로 빠르게 진행

– 전국 평균보다 약 10년 앞서 초고령사회(고령화율 20% 초과)에 도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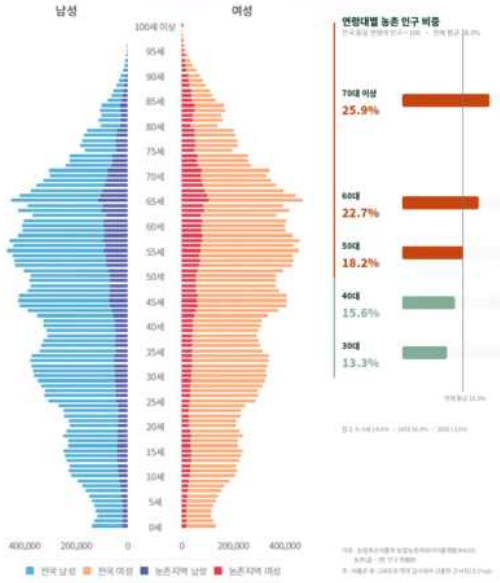
* 농어촌 고령인구: ('00)137만 명(고령화율 14.7%)→('24)259만 명(26.6%)

* 면 부 고령인구: ('00) 101만 명(18.1%) → ('24) 155만 명(34.1%)

<농어촌 인구구조>



<전국대비 읍면 인구(2026.7)>



전국대비 읍면 인구 비율을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13.3%에서 연령이 올라갈수록 단조 증가, 70대 이상은 30대의 **약 2배**
50대를 기점으로 전체 평균(18.0%)을 넘어섬

p.5

농어촌 인구구조 ② : 지역 고령화 vs 종사자 고령화

농촌 '지역'보다 농어'가' 인구의 고령화가 훨씬 심각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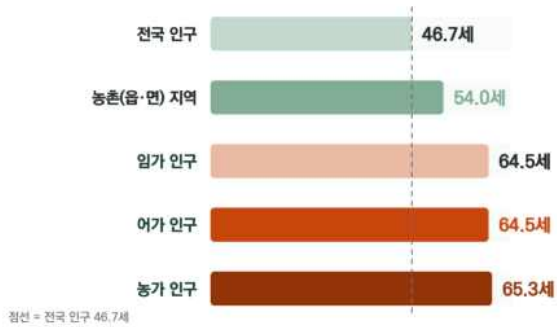
단위 : %



점선 = 전국 인구 20.3%

중위연령

단위 : 세



점선 = 전국 인구 46.7세

어가 '20 36.0% · 60.8세 → '25 48.2% · 64.5세
농가 '20 42.3% · 62.4세 → '25 51.3% · 65.3세

- **농가 인구 고령화율 51.3% — 전국(20.3%)의 2.5배, 농촌 지역(30.6%)의 1.7배**
- **농가 인구 중위연령 65.3세 — 전국보다 18.6세, 농촌 지역보다 11.3세 높음**
- **산업성장동력의 근간인 농어가 인구 고령화가 더 심각**

자료 : 국가데이터처, 2025년 농림어업총조사 결과(잠정), 2026.4. · 농촌(읍·면) 지역은 KASS 농촌 인구 현황판 연령별 분포에서 산출(근사치).

p.6

농어촌 인구구조 ③ : 농가 수 장기 전망 (코호트 분석)

현 추세면 2045년 농가 40만 호 이하, 진입과 은퇴가 함께 움직여야 반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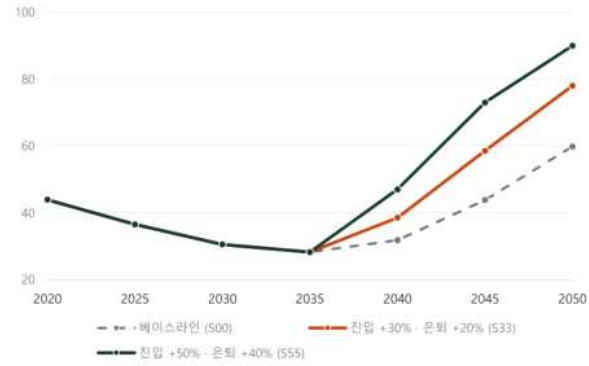
총 농가 수 전망

단위 : 천 호



65세 이하 경영체 비중

단위 : %



주 : 2005-2020년 연령군별 평균 유지율을 2020년 농림어업총조사 농가 수에 적용한 전망. 진입형은 2025년 1,250명 기준.
S33 = 진입을 30% 증가 · 고령층 유지율 20% 감소 시나리오.

- 무대응 시 농가 수 103만 호('20) → 40만 호 이하('45), 2035년엔 경영주의 70% 이상이 고령층
- 진입만 늘리면 규모는 최복되나 고령화 해소는 늦고, 은퇴만 늘리면 구조는 개선되나 농가 수는 급감

자료 : 농업인 퇴직연금 도입 방안 연구(임소영 외, 2026)

p.7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KRE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농업농촌 영향
– 성장동력 약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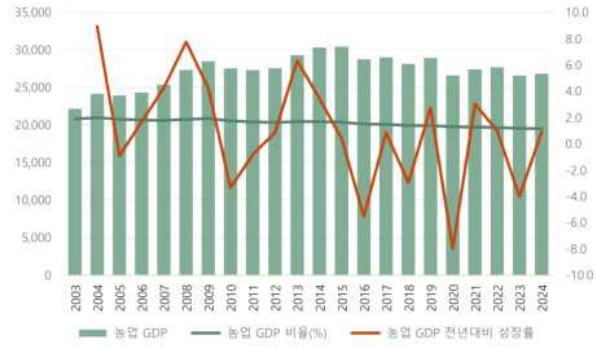
p.8

농업 구조 ① : 성장 · 부가가치

농업 GDP는 2015년 이후 감소 추세, 성장률은 증감 반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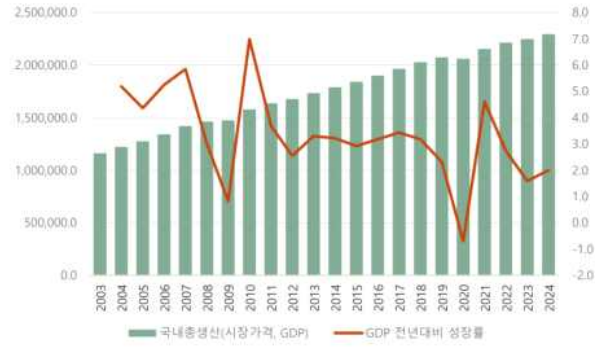
농업 GDP (2020년 기준 실질)

단위 : 십억 원, %



전체 GDP (2020년 기준 실질)

단위 : 십억 원, %



자료 : 통계청 홈페이지(https://kosis.kr/), 경제활동별 GDP 및 GNI(원계열, 실질, 분기 및 연간), 이명기 외(2025) 재인용

- 농업 GDP는 2015년 30.4조 원에서 2024년 26.8조 원으로 약 11.8% 감소하여 2015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함
- 같은 기간 전체 GDP는 약 24.6% 증가한 반면, 농업의 GDP 비중은 1.65%에서 1.17%로 0.48%p 하락
- 농업 GDP 성장률은 +와 −를 반복하며 장기적인 상승세가 형성되지 못하고 연도별 변동성이 큰 흐름이 지속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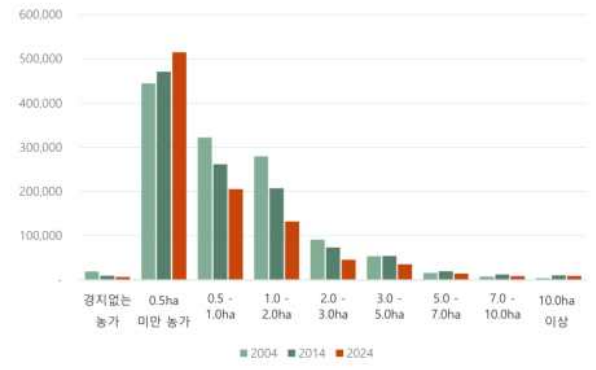
p.9

농업 구조 ② : 농업 기반- 경지규모

경지면적 · 논 면적은 지속 감소, 0.5ha 미만 소규모 농가는 계속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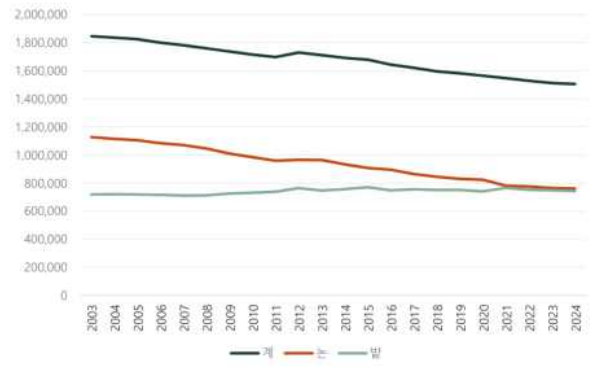
경지규모별 농가 수

단위 : 호



경지면적

단위 : ha



자료 : 통계청, 각 연도, 농림어업조사. 이명기 외(2025) 재인용

- 전체 경지면적은 2003년 184.6만 ha에서 2024년 150.5만 ha로 약 18.5% 감소하였으며, 특히 논 면적은 같은 기간 32.5% 축소
- 0.5ha 미만 농가는 2004년 44.5만 호에서 2024년 51.5만 호로 증가하여 전체 농가의 52.9%를 차지
- 0.5~2.0ha 규모 농가는 60.2만 호에서 33.8만 호로 감소한 반면 10ha 이상 농가는 두 배 이상 증가하여, 중간 규모 농가 축소와 경영규모 양극화가 동시에 진행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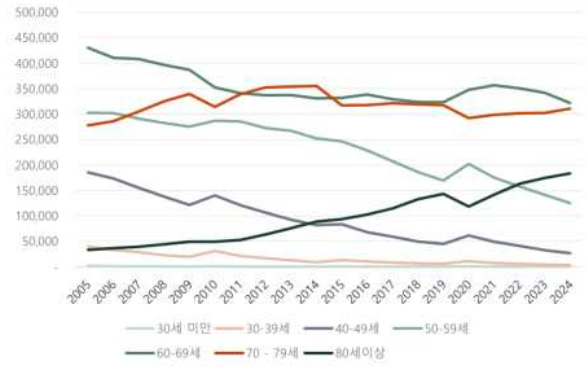
p.10

농업 구조 ③ : 경영주 고령화

전체 농가 수는 감소, 80세 이상 고령 경영주 농가만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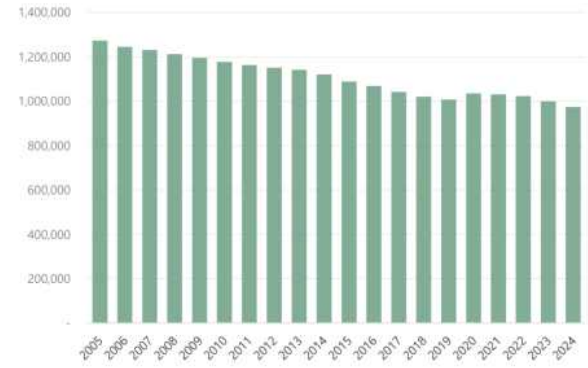
경영주 연령별 농가 수

단위 : 호



전체 농가 수

단위 : 호



자료 : 통계청, 각 연도, 농림어업조사, 이명기 외(2025) 재인용

- 전체 농가 수는 2005년 127.3만 호에서 2024년 97.4만 호로 약 23.5% 감소
- 80세 이상 경영주 농가는 같은 기간 3.3만 호에서 18.4만 호로 약 5.5배 증가하였으며, 2024년 70세 이상 농가는 전체의 50.8%를 차지
- 30~50대 경영주 농가는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고령 농가는 증가하여, 농업인력의 세대교체와 후계 경영주 확보가 더욱 어려워지는 구조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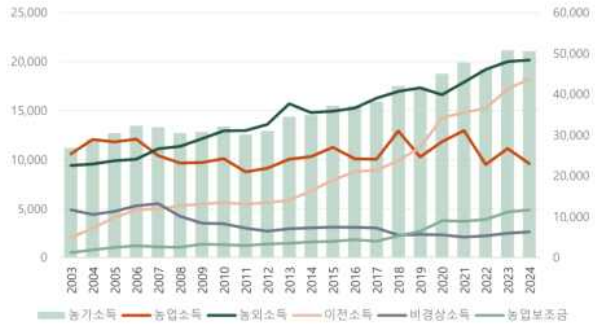
p.11

농업 구조 ④ : 농가소득

농가소득(실질)은 소폭 증가, 그러나 농업소득은 감소 · 정체

농가소득 (명목)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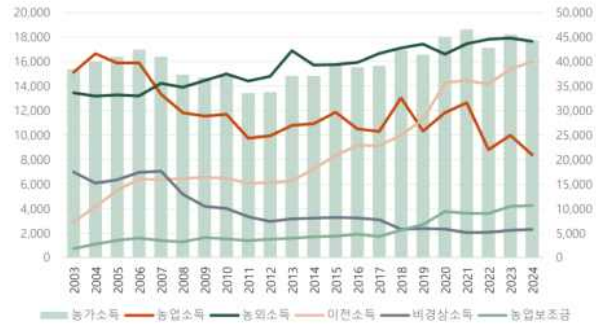
단위 : 천원



주 : 2인 이상 농가.
자료 : 통계청, 각 연도, 농가경제조사, 이명기 외(2025) 재인용

농가소득 (실질) 구조

단위 : 천원



주 : 2인 이상 농가. 실질소득은 명목소득을 소비자물가지수
('20년 기준 100)로 나눈 뒤 100을 곱해 계산.
자료 : 통계청, 각 연도, 농가경제조사, 이명기 외(2025) 재인용

- 명목 농가소득은 2003년 2,688만 원에서 2024년 5,060만 원으로 증가했으나, 물가를 반영한 실질 농가소득 증가율은 약 15.3%에 그침
- 실질 농업소득은 같은 기간 1,512만 원에서 839만 원으로 약 44.5% 감소하였으며, 2024년에는 농외소득과 이전소득이 농업소득을 크게 상회
- 전체 농가소득의 증가는 농업소득보다 농외소득과 이전소득 확대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어, 농업 자체의 소득창출 기반은 약화되는 모습

8

p.12

농업 구조 ⑤ : 농가 유형

자급농가는 늘고 전문농가는 줄어드는 농가 유형 구조 변화

주부업별 농가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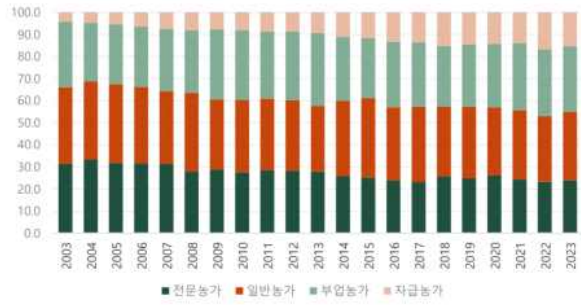
단위 : 개소



주 : 주 · 부업 형태는 전문 · 일반 · 부업 · 자급 4개 유형으로 분류.
주업 = 경지 30a↑ 또는 현금 · 외상판매수입 200만 원↑ 이면서 농업수입 〉 농업외수입.
전문 = 주업 중 경지 3ha↑ 또는 판매수입 2,000만 원↑ , 일반 = 주업 중 그 미만.
부업 = 경지 30a↑ 또는 판매수입 200만 원↑ 이면서 농업외수입 〉 농업수입.
자급 = 경지 30a 미만이면서 판매수입 200만 원 미만.
농가별 가중치 적용, 2014년부터 1인농가 포함.
자료 :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이명기 외(2025) 재인용

주부업별 농가 수 비율

단위 : %



주 : 농가별 가중치 적용, 2014년부터 1인농가 포함.
자료 :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 전문농가는 2003년 34.3만 호에서 2023년 23.9만 호로 약 30.4% 감소하였으며, 전체 농가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31.3%에서 23.9%로 하락
- 반면 자급농가는 4.6만 호에서 15.4만 호로 세 배 이상 증가하였고, 비율도 4.2%에서 15.4%로 11.2%p 상승
- 농업생산과 판매를 주된 소득원으로 하는 전문농가 기반은 축소되는 반면, 소규모·자급 중심 농가는 확대되는 방향으로 농가 구조가 변화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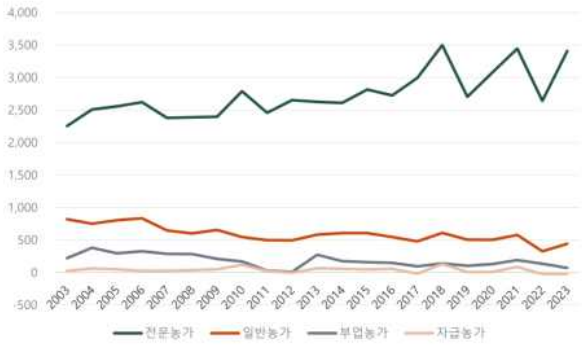
p.13

농업 구조 ⑥ : 유형별 소득

전문농가만 농업소득을 유지, 그 외 유형은 농업소득 비중이 미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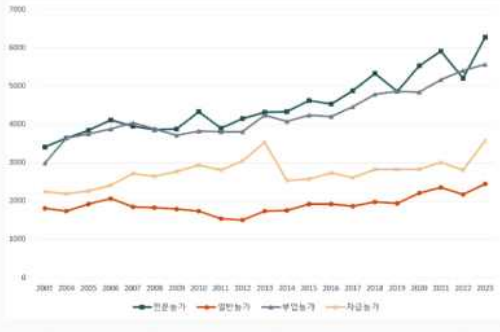
주부업별 농업소득

단위 : 만원



주부업별 농가소득

단위 : 만원



주 : 농가별 가중치 적용, 2014년부터 1인농가 포함.
자료 :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이명기 외(2025) 재인용

- 전문농가의 농업소득은 2003년 2,253만 원에서 2023년 3,411만 원으로 증가하여 농업소득 창출 능력을 일정 수준 유지하였으나, 최근에는 연도별 등락이 반복
- 일반농가의 농업소득은 820만 원에서 443만 원으로 약 46% 감소하였고, 부업농가는 221만 원에서 72만 원으로 약 68% 감소
- 자급농가의 농업소득은 최근 0원 내외 또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실질적인 농업소득 창출이 전문농가에 집중되고 농가 유형 간 소득격차가 확대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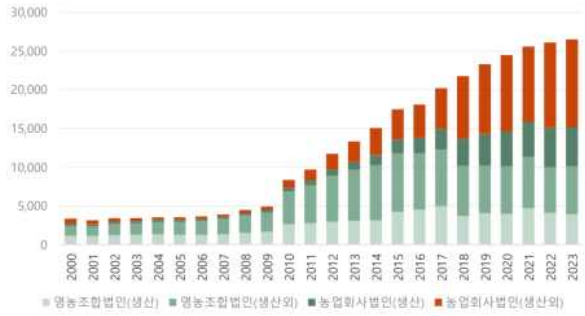
p.14

농업 구조 ⑦ : 농업법인

농업법인 수와 농업생산수입 모두 증가, 생산액 내 비중도 확대

농업법인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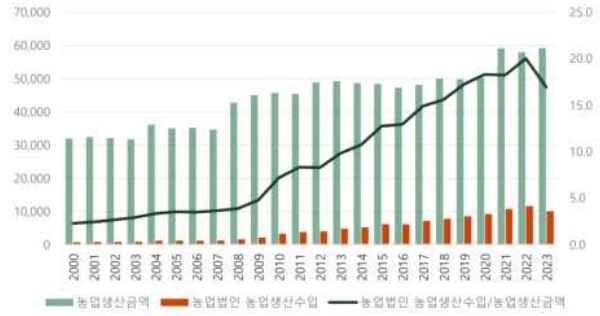
단위 : 개소



자료 : 통계청, 각 연도, 농업법인조사, 이명기 외(2025) 재인용

농업생산액 · 농업법인 농업생산수입

단위 : 십억 원, %



자료 : 통계청, 각 연도, 농림업생산조사 : 통계청, 각 연도, 농업법인조사, 이명기 외(2025) 재인용

- 전체 농업법인 수는 2000년 약 3,400개에서 2023년 약 2만 6,500개로 약 7.9배 증가하였으며, 특히 농업회사법인의 증가세가 두드러짐
- 농업법인의 농업생산수입은 같은 기간 0.7조 원에서 약 10.0조 원으로 13배 이상 확대되어 법인 부문의 생산 규모도 빠르게 성장
- 농업생산액에서 법인 생산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은 2.3%에서 16.9%로 상승하여 농업법인의 역할이 확대되었으나, 2022년 20.0%에서 2023년 하락하는 등 최근 변동성도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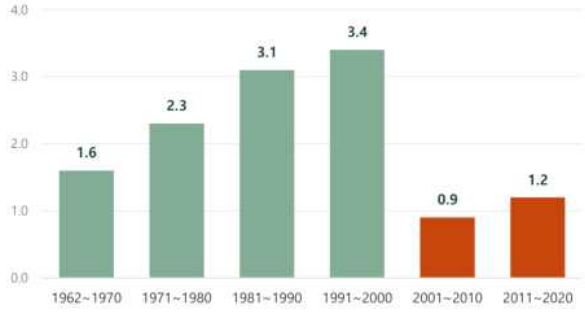
p.15

농업 구조 ⑧ : 생산성

농업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1990년대 이후 뚜렷하게 둔화

기간별 한국농업 총요소생산성 전년 대비 증감률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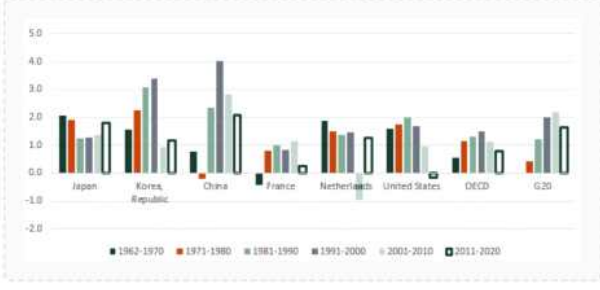
단위 : %



자료 : USDA, Economic Research Service, data as of October 2024.;
'25~'29 공익직불제 기본계획 수립방안 연구(이명기 외, 2024)에서 재인용.

기간별 한국 · 주요국 총요소생산성 전년 대비 증감률 평균

단위 : %



자료 : USDA, Economic Research Service, data as of October 2024.;
'25~'29 공익직불제 기본계획 수립방안 연구(이명기 외, 2024)에서 재인용.

- 농업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1960년대 1.6%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1991~2000년 연평균 3.4%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
- 이후 2001~2010년에는 0.9%, 2011~2020년에는 1.2%로 낮아져 최근 생산성 증가율은 1990년대의 약 3분의 1 수준에 머무름
- 투입 확대만으로 농업 성장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기술혁신, 규모화, 경영 효율화 및 인적자본 확충을 통한 생산성 회복이 성장동력 재건의 핵심 과제

p.16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KRE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농업농촌 영향 – 농촌소멸

p.17

농업 쇠퇴– 농촌 지속가능성 약화

전국 1,404개 읍·면을 농업지수(경영주 수, 농지면적)와 인구지수(인구변화율, 고령화율)로 유형화

과반수 이상의 읍면에서 농업 감소와 인구 지속가능성 약화가 동시에 발생 ▶ 시장개방에 따른 농업 쇠퇴가 농촌지역 쇠퇴와 상당 부분 관련
도시화 유형(585개소)은 수도권·대도시·거점도시 인근 읍·면 또는 원격지더라도 교통 양호 또는 경관 우수 읍·면, 즉 농촌성 유지 아닌 외부요인 작용

농촌소멸 진단 유형별 분포(2010–2020년 변화 기준)

단위: 개소

농촌성 쇠퇴	도시화
농업지수 – · 인구지수 –	농업지수 – · 인구지수 +
52.4%	41.7%
737개소	585개소

농업지대화	농촌성 유지
농업지수 + · 인구지수 –	농업지수 + · 인구지수 +
3.0%	2.8%
42개소	40개소

· 농촌소멸 현상 진행 읍·면이 97.2%
· 농촌성 유지 읍·면은 2.8%(40개소)에 불과

자료: 이명기 외, 2023,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농촌공간 실태분석과 적용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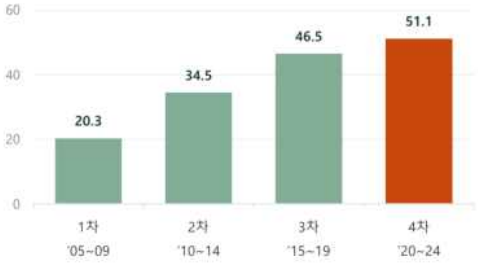
p.18

농촌 불균형①: 도시–농촌 비교 관점 / 주관 지표

삶의질향상정책 차수별 투융자 증가, 도농 만족도 격차는 유지

제1~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 차수별 투융자 규모

단위: 조 원, 삶의질향상기본계획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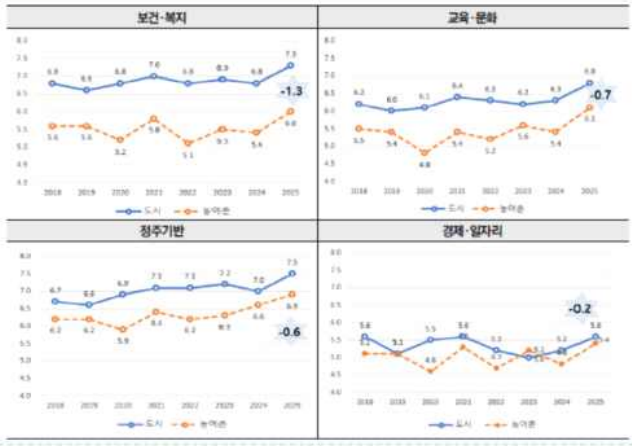


· 투융자 규모: 20.3조 → 51.1조 (2.5배)
· 참여 부처: 14 → 21개

자료: 김용렬 외, 2025, 제5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수립방향 연구

도시–농촌 주민의 정주만족도 비교 (2018~2025)

단위: 점(0~10점), 자료: KREI, 「농어촌 삶의 질 실태와 주민 정주만족도 조사」 각연도



· 4개 정책부문 만족도는 대체로 상승, 그러나 도·농 격차는 크게 좁혀지지 못하고 유지
· 특히 보건·복지 부문에서 큰 격차, 경제·일자리 부문은 만족도 최저 수준

p.19

농촌 불균형①: 도시–농촌 비교 관점 / 객관 지표

상·하수도 등 일부 인프라 격차는 완화, 소득·교육·의료 등 전반적 격차는 확대

상·하수도 보급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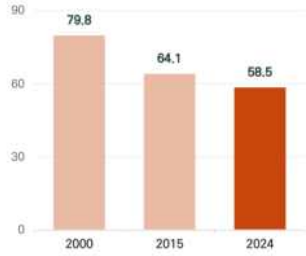
단위: %, 자료: 상수도·하수도정보시스템



하수도보급율은 농촌 78.8% vs 전국 95.6%,
농촌지역도 상승했으나 여전히 16.8%p 낮음

도시가구 대비 농가소득 비율

단위: %,
자료: 농가경제조사·가계동향조사, 도시근로자가구(2인이상)기준



79.8% → 58.5% (−21.3%p)
2012년 57.2% 저점 후 60% 내외 등락

초등학교 폐교 수

단위: 개소, 자료: 교육부 학교알리미



면 지역 42 → 164개소 (3.9배)
동 지역 4 → 25개소

산부인과 감소율(2006→2025)

단위: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



군 −46.7%, 도농복합시−15.9%
도시 −29.5%

농촌지역의 상대적 취약성

농어촌 빈집
49 → 78천 동 ('15 → '24)
전국 빈집의 58.3%가 농어촌 소재

대중교통 최소서비스 부족 마을(법정리)
26.8 → 30.8% ('20 → '24)
하루 3회 이상 버스 운행 법정리 비율은 다소 개선(87.1→89.2%)

면 지역 도시가스 보급률
26.3% ('24)
전국 85.6%, 읍 지역 75.3%

자료: 성주인 외, 2026, 제5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고도화 연구(진행중).

p.20

농촌 불균형②: 농촌지역 내 상대적 불균형 관점

농촌지역 내 상대적 불균형 발생

농촌지역 내 인구 분포의 공간적 불균형 심화

수도권 및 도시 근교지, 읍 지역 중심으로 인구가 증가, 농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면 지역 인구는 감소

단위: 명, %, 자료: 통계청(각 연도). 인구총조사.

구분		읍면	수도권			비수도권		
			2015년	2020년	연평균 증가율	2015년	2020년	연평균 증가율
도농복합시		읍부	1,199,797	1,414,706	3.35	1,352,357	1,455,785	1.48
		면부	737,747	668,519	-1.95	1,887,424	1,956,692	0.72
		계	1,937,544	2,083,225	1.46	3,239,781	3,412,477	1.04
군	광역	읍부	21,089	21,601	0.48	424,956	569,294	6.02
		면부	59,844	63,711	1.26	135,708	86,234	-8.67
		계	80,933	85,312	1.06	560,664	655,528	3.18
	일반	읍부	73,599	74,286	0.19	1,545,004	1,577,380	0.42
		면부	131,086	142,069	1.62	1,823,069	1,733,556	-1.00
		계	204,685	216,355	1.12	3,368,073	3,310,936	-0.34
농촌 총계			2,223,162	2,384,895	1.41	7,168,518	7,378,941	0.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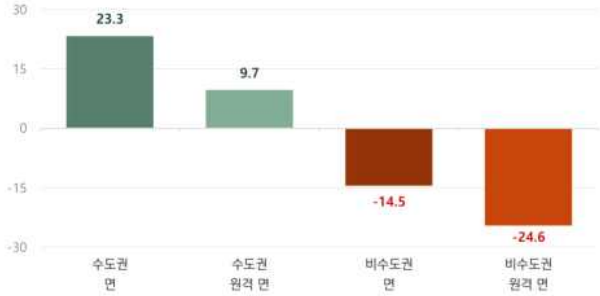
자료: 송미령 외, 2022, 신 균형발전 전략과 과제: 도농상생을 위한 농촌 활성화, KREI농정포커스, 제206호.

2000~2022년 비수도권 면은 인구 감소 추세, 특히 비수도권 원격 농어촌의 면 인구는 24.6% 감소

* 수도권 면 인구 23.3% 증가, 비수도권 면 인구 14.5% 감소
* 수도권 원격 농어촌 면 인구 9.7% 증가, 비수도권 원격 면 인구 24.6% 감소

면 지역 인구 증감률(2000~2022)

단위: %, 자료: 인구총조사



자료: 성주인 외, 2026, 농촌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제5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고도화 연구(진행중).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KRE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책패러다임 전환 – 성장동력 회복

정책 전환 ①: 2026 농정 대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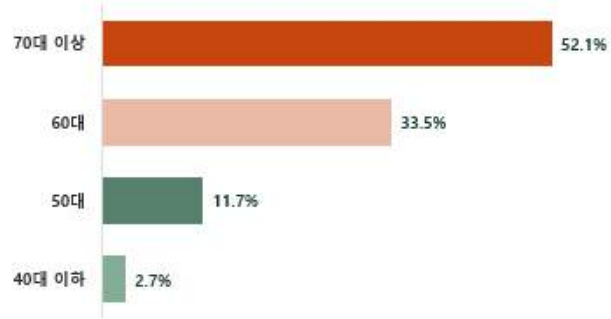


정책 전환 ② : 농업자산의 세대 간 고착

농업자산이 고령층에 고착되고, 규모화 추세도 2020년 이후 꺾임

경영주 연령별 토지 소유 비중 추정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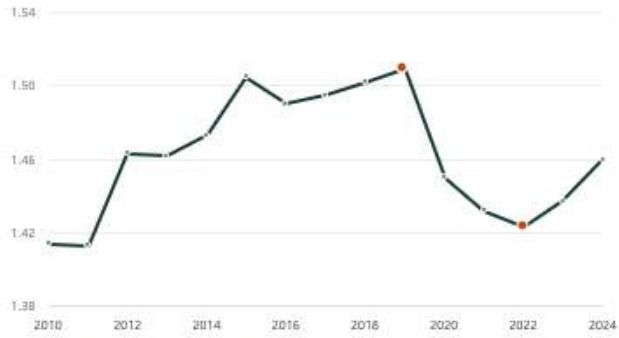
단위 : %



70대 이상이 절반 이상(52.1%)을 보유(추정치)

호당 경지면적 추이

단위 : ha



● 2019년 1,509ha 정점 — 2022년 1,423ha

- 토지 소유가 고령층에 고착 — 40대 이하 2.7%, 50대 11.7% vs 60대 33.5%, 70대 이상 52.1%
- 노후소득 불확실성이 크면 농지는 '영농 기반'이 아니라 '노후 대비 자산'으로 계속 보유됨
- 규모화가 멈춘 원인은 농지 부족이 아니라, 생산성 높은 연령층으로 이용이 넘어가지 않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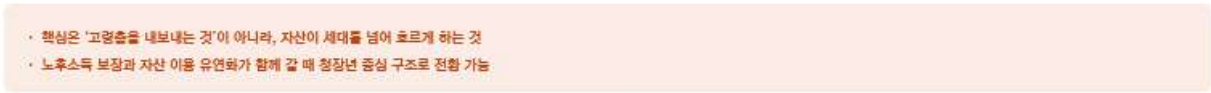
자료 : 국가데이터처 간 역도 농가경제조사 · 농림어업조사 · 농업역학조사 : 농업의 퇴진역을 방안 역구(인소로 외, 2026).

정책 전환 ③ : 청년 정책 강화

청장년 경영체 중심으로, 고령층 자산을 유연하게 이용하는 구조로







감사합니다
QnA
mbkim@krei.re.kr

주제발표

2

청년농 영농 정착의 구조적 공백과 과제

농협미래전략연구소 전경미 부연구위원

청년농 영농 정착의 구조적 공백과 과제

전 경 미

농협미래전략연구소

본 발표는 발표자 개인의 의견으로, 농협중앙회의 공식 견해는 아님

목 차

I 연구 개요

II 청년농업인의 영농 정착 유형과 단계별 경로

III 영농 정착 과정의 구조적 공백

IV 정착의 조건: 연결 중심 지원체계

I. 연구 개요

농가 고령화, 지역소멸, 그리고 청년농

지역소멸의 현재

- 농가 인구 51.3%가 65세 이상(40세 미만 12.9%), 경영주 기준 60대 이상 78.8%(40세 미만 1.1%) – 농업 인력의 세대 재생산 단절이 곧 지역소멸의 문제
- 전국 소멸위험지수 56.6 – 2000년(258.6)의 5분의 1 수준. 229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 단계 62곳(27.1%), 심각 단계 7곳
- 전남, 17개 시·도 중 소멸위험지수 최저(30.6) – 경북·강원·전북·경남과 함께 5개 도가 경계 단계 농업·농촌 지역이 지역소멸의 최전선 ※ 소멸위험지수: 20~39세 여성 인구 ÷ 65세 이상 인구 ×100, 2025년 신분류 기준(낮을수록 위험)

유입의 시대, 정착이라는 질문

- 청년창업농 선발 연 2,000명(2018) → 5,000명(2025), 농지은행 예산 68% 증가 등 유입 지원의 지속 확대
- 그럼에도 정착 과정의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영농을 포기하는 사례가 반복되는 현실
- "데려오는 정책은 많다. 데려온 청년은 잘 정착하고 있는가?" – 정책의 질문을 '유입에서 정착으로' 옮겨야 할 시기 도래

※ 출처: 국가데이터처(2026), 2025년 농림어업총조사(잠정); 한국고용정보원(2025), 「지방소멸 2025: 신분류체계와 유형별 정책과제」(2025.6월 주민등록인구 기준); 농림축산식품부(2025)

p.3

I. 연구 개요

연구 배경과 목적

연구 배경

- 농업 고령화의 구조적 고착 – 세대 재생산 단절이 단순한 인구 구조 문제를 넘어 청년농의 진입 기회를 차단
- 2018년 이후 청년농 지원 체계의 지속적인 확대에도 유입과 정착이 여전히 쉽지 않은 현실 – 규모 확대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구조적 한계의 존재를 시사
- 기존 연구는 개인 특성·개별 정책 효과 분석에 집중 – 정착 과정 전반의 구조적 파악과 승계·비승계의 이분법을 넘어서는 유형화는 미흡

연구 목적

- 승계 여부 중심의 이분법을 넘어 청년농을 '영농 지향성'에 따라 새로운 유형 분류 시도
- 영농 진입부터 정착에 이르는 경험의 흐름을 단계적으로 구조화하고 청년농 유형별 고충과 대응 양상을 분석
- 정착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도적 공백을 규명하고, 청년농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체계의 방향을 도출하고자 함

p.4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

“청년농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p.5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

“청년농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p.6

새로운 대한민국 농업

연구 방법

분석 자료

- 청년농이 자신의 경험을 직접 서술한 농정원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우수사례」 수기 원문을 분석 자료로 활용
- 8개년 수기 209건(2018~2025) 전수 분석으로 영농 진입과 정착 과정의 흐름과 구조를 통시적으로 파악
- 청년농 13명 심층면담(2026.4.~6.)으로 보완 – 유형·지역·성별·영농경력의 다양성을 고려. 탈농 사례 포함

분석 방법

- 질적 내용분석을 통해 영농 지향성 유형과 정착 4단계를 귀납적으로 도출, 심층면담으로 경험적 맥락을 보완
- 분석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생성형 AI(Claude·Gemini)를 보조 코딩에 활용하되, 최종 범주화와 해석은 연구자가 수행

〈연구의 분석 프레임워크〉



p.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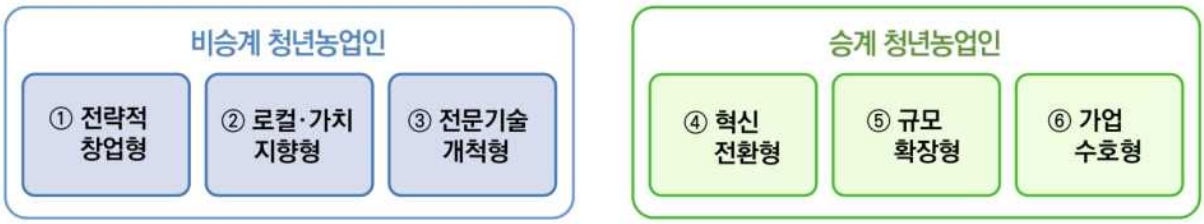
새로운 대한민국 농업

I 연구 개요
II 청년농업인의 영농 정착 유형과 단계별 경로
III 영농 정착 과정의 구조적 공백
IV 정착의 조건: 연결 중심 지원체계

p.8

6가지 청년농 유형

209건의 수기에서 반복되는 서사 구조를 바탕으로 기존의 승계 여부 이분법을 넘어, 청년농을 영농 지향성*에 따라 6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음



* *영농 지향성이란?*
✓ '청년농업인이 **농업을 시작한 동기, 현장에서의 실천 방식, 그리고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표**가 결합된 개념'
✓ 사전에 설정된 분석 틀이 아니라 209건의 수기를 반복적으로 읽고 비교하는 과정에서 귀납적으로 도출

p.9

6가지 청년농 유형별 특징

6가지 청년농 유형별로 핵심 동기, 특징 등의 차이가 있으며 209명 수기에 등장하는 청년농 유형 중에서는 전략적 창업형의 비율이 가장 높았음

분류	세부 유형	핵심 동기	특징	비율(명)
비승계	① 전략적 창업형 (Entrepreneurial)	"어떻게 팔 것인가"	농업을 '**비즈니스 기회**'로 인식. IT·경영 전공자가 많으며 스마트팜이나 고부가가치 작물 선택	43.1% (90명)
비승계	② 로컬·가치 지향형 (Value-based)	""왜 농업인가"	귀촌/귀농을 통한 '**삶의 질**'과 '**공동체**' 중시. 유기농, 친환경, 체험 농장(6차 산업) 선호	11.5% (24명)
비승계	③ 전문기술 개척형 (Technical Specialist)	"무엇을 개발할 것인가"	**특정 기술이나 특수 작목**(곤충, 종자, 신품종)에 집중. 학구적 접근. 연구원이나 기술자 출신이 많음	8.1% (17명)
승계	④ 혁신 전환형 (Transforming)	"부모님과 다르게"	부모의 **관행 농법을 전면 개편**. 스마트팜 도입, 작목 전환, 브랜딩 혁신 주도(세대 갈등 최다)	12.9% (27명)
승계	⑤ 규모 확장형 (Scale-up)	"더 크게"	대규모 생산 기반을 유지하며 유통 구조 혁신이나 법인화를 통해 **경영 규모를 대폭 확대**	17.7% (37명)
승계	⑥ 가업 수호형 (Maintenance)	"이어받는다"	부모님의 농법과 가치를 존중하며 안정적으로 승계. 효율성을 높이는 수준의 **완만한 변화 추구**	6.7% (14명)

p.10

영농 정착 4단계

청년농의 영농 정착 과정은 영농 지향 유형에 관계없이 진입·적응/위기·안착·성숙의 4단계로 공통적으로 나타남

〈청년농업인의 영농 정착 4단계〉

1단계: 진입	2단계: 적응/위기	3단계: 안착	4단계: 성숙
• 영농을 준비하고 시작하는 단계 • 농지·자본·기술 확보 및 영농 기반 구축이 핵심 과제	• 영농 초기 시행착오를 겪으며 경영을 안정화하는 단계 • 기술·자금·판로·관계 등 복합적 어려움이 집중됨	• 경영 기반이 형성되고 안정적 수익이 창출되기 시작하는 단계 • 지속 가능한 영농 구조 확립이 핵심 과제	• 영농이 안정화되고 지역 사회 내 역할이 확장되는 단계 • 후계 육성·네트워크 참여 등 사회적 기여로 이어짐

p.11

[참고] 영농 정착의 4단계 경로

〈비승계농 유형별 영농 정착 과정의 4단계 경로 프로파일〉

유형 \ 단계	1단계: 진입 (Entry)	2단계: 적응/위기 (Adaptation)	3단계: 안착 (Settlement)	4단계: 성숙 (Maturity)
전략적 창업형	*"아무 연고 없는 담양, 곧 40을 바라보는 나이에 준비 없이 남의 밭을 빌려 농업에 뛰어들었다"* 귀농(25건)·시작(30건). 직장 포기 후 즉각 창농 패턴	*"첫 해 태풍으로 여주를 잃고, 이듬해 우박으로 작물 대부분 피해를 입었다"* 어려움(31건)·부족(18건). 기후 피해·자금난이 가장 빈번한 위기 유형	*"청년창업농 1기 선정 후 바우처로 가공상품 개발, 매출 4.5억·근로자 6명을 확보하였다"* 지원(34건)·매출(17건). 판로 확보가 안착의 핵심 지표	*"농업 프랜차이즈화로 초보 농업인의 정착을 돕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한다"* 지역(73건)·멘토(13건). 지역 선도자·사회적 기여 지향 강함
로컬·가치 지향형	*"자연에 동화되고 스며들면서 회색빛 건물 일색의 도심을 떠나, 대중교통의 노예가 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곳에서 살고 싶다"* 귀농(10건)·준비(5건). 가치·삶의 전환 동기가 서사 전반에 깔림	*"자본과 토지 없이 농사를 시작해 생활비가 바닥나고, 해결방안을 듣지 못해 절망감을 느꼈다"* 어려움(10건). 경제적 기반 취약+지역 인맥 부재가 가장 큰 장벽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1기 선정, 바우처로 생활비 해결 후 친환경 청년농부 사업을 연계했다"* 성공(7건)·확보(6건). 경제 안정화가 공동체 활동의 선결 조건	*"지역 어르신들과 반찬·채소 나눔을 하며 공동체 일원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지역(18건)·공동체(2건). 공동체 통합이 성숙의 최종 목표로 수렴
전문기술 개척형	*"직장·대학원 다니며 꽃무지 유충 25마리로 6개월간 가정에서 시험 사육하며 귀농 준비했다"* 귀농(8건)·교육(4건). 기술·품목 연구에 진입 전부터 집중	*"귀농자와 농업인의 신분 차이를 몰라 서류 준비에 어려움, 행정 절차를 직접 익혀야 했다"* 시행착오(3건)·극복(2건). 행정 장벽+기술 고도화 동시 압박이 특징	*"가락시장 200개 품목 직접 분석해 특산물을 선택, 지역 농가와 농기계 교환으로 정착했다"* 인증(4건)·선정(4건). 품목 특화·인증 획득이 안착 신호	*"기존 농업 방식에 전기·LED 기술 융합 스마트팜 구축 중, 1인10인 묶 시스템 개발 후 이웃 농가 컨설팅 계획 중이다"* 지역(7건)·멘토(2건). 기술 이전·컨설팅이 성숙 서사의 핵심

※ 출처: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우수사례 수기 209건(2018~2025) 분석 결과. 인용구는 수기 원문 발췌

p.12

[참고] 영농 정착의 4단계 경로

〈승계농 유형별 영농 정착 과정의 4단계 경로 프로파일〉

유형 \ 단계	1단계: 진입 (Entry)	2단계: 적응/위기 (Adaptation)	3단계: 안착 (Settlement)	4단계: 성숙 (Maturity)
혁신 전환형	*"부모님이 물려준 1ha로는 부족해 농어촌공사 농지은행 2030사업으로 4ha를 임대해 시작했다"* 시작(9건)·귀농(8건). 부모 기반 위에서 독자 방향 모색이 서사 시작점	*"친환경 농법과 자금계획에 대한 주변 농가와 의견 충돌, 인식 부족, 자금 부족 등 복합적 어려움을 겪었다"* 반대(2건) 명시적 등장. '부모·주변 반대' 키워드 유의미하게 출현	*"청년창업농 지원 정책으로 자금 확보, 유기농 인증 받아 한살림에 전량 출하하며 소득 발생 시작됐다"* 매출(8건)·성공(7건)·안착(4건). 인증·출하처 확보가 갈등 서사	*"청년농업인협의회를 발족해 27명의 청년과 협업 농장 추진, 지역사회 프로젝트 진행했다"* 지역(20건)·확장(4건). 갈등 극복 후 지역 리더십으로 연결
규모 확장형	*"졸업 후 어머니가 홀로 운영하는 시골 낙농장에 들어가 시키는 일만 하며 농업을 처음 접했다"* 시작(10건). 갈등 서사 없이 부모 농장 합류→학습 패턴	*"아버지와의 멘토 관계가 어려워 농업 기술 습득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어려움(16건). 갈등이 명시되지 않고 기술·경영 어려움으로 서술	*"청년창업농 합격 후 법인 설립·드론 자격증·디지털 마케팅 교육 마치고 월 80만원 지원금으로 사업 안착에 성공하였다"* 안착(8건)·지원(7건)·성과(6건). 지원 사업+역량 강화가 규모화의 발판	*"4-H·품목연구회·청년모임 활동으로 배움 나누고 경영분석·부채관리 노하우를 지역 후배에게 전파하였다"* 지역(28건)·멘토(4건)·네트워크(4건). 규모형→지역 거점화
가업 수호형	*"아버지의 갑작스런 사고로 전남 진도로 내려가 농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귀농' 키워드 0건. 귀농 결심 서사 없이 가족 상황으로 직접 진입	*"연작피해로 수확량이 줄고 생활비조차 마련하기 어려울 만큼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다"* 어려움(7건). 부모 농업 방식의 약점을 현실에서 마주치는 서사 패턴	*"'청년창업농' 면접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으나 최종 합격, 3년간 지원금·대출 혜택으로 경영 기반 마련하였다"* 인증(5건)·청년창업농(3건). 지원 사업 선정이 가업 계승의 공식 인정	*"4-H 활동으로 회원들과 농법을 공유하며 지역 리더로 성장하고 있다"* 지역(11건). 가업 유지→지역 참여로 확장이 완만

※ 출처: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우수사례 수기 209건(2018~2025) 분석 결과. 인용구는 수기 원문 발췌

p.13

단계 마다 다른 어려움

청년농이 겪는 어려움은 단계마다 다른 성격으로 나타나며 특히 적응/위기 단계에 집중됨

〈청년농업인의 단계별 고충〉

1단계: 진입	2단계: 적응/위기	3단계: 안착	4단계: 성숙
• 농지 확보 • 초기 자본 조달 • 정보 비대칭 • 독립·역할 분담	• 자금 고갈·판로 개척 • 기후 피해(폭염 등)* • 담보 중심 금융 장벽 • 세대 갈등 • 지역 고립	• 지원 종료 후 공백 '시한부 안전망' • 후속 금융 공백 • 세대 간 경영 이양	• 지역 리더십·사회적 역할 확보 (정착의 완성)

* 기후 피해(폭염 등): 최근 여름철 폭염 심화로 스마트팜·첨단온실의 냉방비 등 운영비 부담이 가중되어, 시설 투자 지원이 실질 소득으로 이어지도록 운영비 완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요구됨

p.14

Ⅰ 연구 개요

Ⅱ 청년농업인의 영농 정착 유형과 단계별 경로

Ⅲ 영농 정착 과정의 구조적 공백

Ⅳ 정착의 조건: 연결 중심 지원체계

p.15

정착 단계별 청년농 지원 제도 현황

〈정부·유관기관의 청년농 지원 제도 현황〉

정착 단계	사업명	주요 내용	비고	주관
1단계 진입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 월 최대 110만원 지원금(1년차 110만원, 2년차 100만원, 3년차 90만원) + 후계농자금·농신보·농지임대 연계	연 5,000명, 최장 3년	농식품부·농정원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 농지·시설 매입·임차 융자. 연 1.5% 고정금리, 5년 거치 20년 상환. 농신보 95% 보증 연계	최대 5억원 (총 1조 500억 규모)	농식품부·농협
	귀농창업자금	- 귀농인 영농 창업 융자. 농외소득 제한 규정 폐지	최대 3억 7,500만원	농식품부·농협
	농지은행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 고령·비농업인 농지 매입 후 청년농 저임대료 공급. 선임대후매도 연계 (최대 30년 경작 후 매입 가능)	'26년 1조 6,000억원 (전년 대비 68%↑)	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청년농촌보금자리	- 귀농·귀촌 청년·신혼부부 대상 임대주택단지 조성	누계 27개소 ('25년 기준)	농식품부·LH
2단계 적응/위기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 농작물재해보험,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 지원 - 자연재해·사고에 따른 손실 보전	보험료 국고 지원	농식품부·농협
	시군 농업기술센터 교육	- 품목별·청년농 전용 교육과정 -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운영	전국 시군 운영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

p.16

정착 단계별 청년농 지원 제도 현황

〈정부·유관기관의 청년농 지원 제도 현황(계속)〉

정착 단계	사업명	주요 내용	비고	주관
2단계 (계속)	청년농 취업·경력 연계	- 원예농협·양돈농협·축협 등 취업을 통한 기술·인맥 습득 후 창농 연계 경로	지역 농축협별 운영	지역 농축협
3단계 안착	스마트팜 혁신밸리 창업보육	- 스마트팜 기초이론~경영실습 - 임대형팜 연계 창업 유도	연 200명, 최장 20개월 (만 40세↓)	농식품부·한국농업기술진흥원
	농촌 융복합 산업인증제	- 농산물 활용 + 농촌자원 활용 창업 유형 신설('25년~) - 사업화 자금·컨설팅 지원	'농촌융복합산업+(플러스)' 신규 유형 추가('26년 2월)	농식품부
	청년식품창업센터	- 예비·초기 창업자 대상 창업교육 - 시제품 제작, 투자 유치 지원	전북 익산 ('24년 11월 개소)	농식품부
4단계 성숙	농업경영체 투자펀드	- 융자가 아닌 투자(지분) 방식 - IR 피칭 + 현장 검증	농업정책금융원 운영	농업정책금융원
	청년기업 성장지원	- 39세 이하 청년 대표 창업 8년차 이상 기업 장비·시설 도입 지원	총 200억 원 융자 ('25년~)	농식품부

※ 출처: 농림축산식품부(2026) 및 각 기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자 작성

p.17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정착의 장벽

영농 정착 단계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의 내용과 강도는 승계 여부 및 영농 지향 유형에 따라 상이함

분류	세부 유형	특징	구조적 공백	위기 집중
비승계	① 전략적 창업형 (Entrepreneurial)	농업을 '비즈니스 기회'로 인식. IT·경영 전공자가 많으며 스마트팜이나 고부가가치 작물 선택	판로 개척 실패·자금 고갈: 첫 소비처 확보까지의 공백	2단계 적응
	② 로컬·가치 지향형 (Value-based)	귀촌/귀농을 통한 '삶의 질'과 '공동체' 중시. 유기농, 친환경, 체험 농장(6차 산업) 선호	가치 기반 사업 모델을 이해하는 연결 채널 부재	2~3단계
	③ 전문기술 개척형 (Technical Specialist)	특정 기술이나 특수 작목(곤충, 종자, 신품종)에 집중. 연구원이나 기술자 출신이 많음	기술 개발보다 기술의 사업화 연결 구조 부재	3단계 안착
승계	④ 혁신 전환형 (Transforming)	부모의 관행 농법을 전면 개편. 스마트팜 도입, 작목 전환, 브랜딩 혁신 주도(세대 갈등 최다)	세대 간 영농 방식 차이를 중재할 외부 조력자의 부재	2단계 적응
	⑤ 규모 확장형 (Scale-up)	대규모 생산 기반을 유지하며 유통 구조 혁신이나 법인화를 통해 경영 규모를 대폭 확대	스케일업 단계에서의 연속 금융 공백	3단계 안착
	⑥ 가업 수호형 (Maintenance)	부모님의 농법과 가치를 존중하며 안정적으로 승계. 효율성을 높이는 수준의 완만한 변화 추구	무형 노하우 전수·경영권 이양 공식화 지원 체계 부족	3~4단계

p.18

III. 영농 정착 과정의 구조적 공백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

스마트팜 – 지원은 시설에서 멈췄다

시설 도입 지원에 비해, 운영 역량 강화와 사후관리 지원은 미흡함

수기 209건 중 **81건(38.8%)**이 스마트팜 관련 경험

: 2022년 이후 급증(혁신밸리·임대형 스마트팜 사업 본격화 시기와 일치)

주요 애로사항

1. 초기 투자·자본 부담 26건
2. 기술·데이터 활용 역량 부족 23건
3. 시설 유지보수·고장 대응 11건

> 아무리 자동화된 시설이라도 작물의 생리현상에 대한 기본 지식·경험 없이는 아무 소용없었다.
>
> 청년농업인, 농정원 수기, 2018

> 복합 환경제어 프로그램의 기초를 잘 몰라 생육 상태를 적절히 조절하지 못해 큰 어려움을 겪었다.
>
> 청년농업인, 농정원 수기, 2024

시설은 첨단화됐으나, 운영 지원은 제자리

p.19

III. 영농 정착 과정의 구조적 공백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

스마트팜 – 제도는 있으나, 닿지 않았다

순조롭다 생각했는데, 복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 창업자금으로 농지를 확보한 뒤 지자체 시설기반구축 사업에 선정됐으나, 자부담분을 같은 자금으로 충당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음. "갓 졸업한 대학생 신분"이라 대안이 없어 고금리 자금으로 대체 조달
- 첫해 수익은 거의 없었고, 작물이 자라지 않는 날에는 불면증에 시달림

청년농업인, 농정원 수기, 2024

지정된 업체를 이용하려니, 자부담 부담이 훨씬...

- ICT 융복합 보조사업(자부담 50%)에 선정됐으나, 지정된 기자재를 정해진 업체에서만 구매해야 하는 구조라 자부담 규모가 크게 늘어남. 결국 보조금을 포기하고 필요한 설비를 직접 설계·제작
- 이후 정부 지원 대신 자체 제작한 설비로 영농을 이어감

청년농업인, 농정원 수기, 2022

보조사업의 자부담 구조가 사실상의 진입장벽으로 작동

- 자격 요건을 충족해도 초기 자본 조달 역량이 없으면 실질적 접근이 어려움
- 자산·신용이 취약한 신규 청년농일수록 지원에서 밀려나는 사각지대 발생

p.20

III. 영농 정착 과정의 구조적 공백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

지원은 진입 단계에 집중, 위기는 적응 단계에

지원의 분포 – 진입 단계 집중

- 정부·유관기관의 지원 제도는 정착 단계별로 외형상 촘촘하게 마련 – 정착지원금·후계농자금·농지은행·스마트팜 혁신밸리·투자펀드 등(문제는 개별 사업의 부족이 아님)
- 그러나 자원은 영농경력 3년 이하 진입 초기에 집중 투입되는 구조 – 단계별 제도가 분절 운영되어 안착 이후 단계의 지원 공백이 반복
- 정착지원사업의 '시한부 안전망' 구조 – 지원이 종료되는 3년 시점이 유동성 위기에 가장 취약한 시기와 중첩

위기의 분포 – 적응 단계 집중

- 전체 수기의 위기 표현 111건이 2단계 적응 구간에 집중 – 기술 실패·자금 고갈·판로 불안·부채·지역 고립의 중첩
- 초기 투자 이후 수익 창출까지의 공백 속에서 청년농의 이탈 위험이 가장 높아지는 구간
- 지원과 위기의 구조적 미스매치 – 필요한 자원과 지원을 적시에 연결·조정하는 기능의 부재가 핵심

p.21

III. 영농 정착 과정의 구조적 공백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

청년농에게 농협은.....

〈농협의 청년농 관련 주요 사업 현황〉

기능	사업·제도명	주요 내용	해당 단계
교육·정보	청년농부사관학교	4개월 합숙 400시간+ 교육. 딸기·토마토·엽채류 등 작목별 30명씩 총 90명. 2025년 8월 기준 누계 721명 배출. 졸업 후 영농정착 컨설팅·브랜딩·HACCP 인증·농협몰 입점 등 후속 지원 연계	1 단계
	창업농지원센터 귀농·귀촌 컨설팅	청년농업인 생애주기를 진입기·정착기·성장기 3단계로 구분하여 맞춤 지원. '농업일자리 탐색과정' 운영으로 귀농·귀촌 진입 경로 안내. 연 3,500명 이상 귀농·귀촌인 참여	전 단계
	강소농 교육·귀농귀촌 아카데미	지역농협 주관 농업 기초·심화 교육. 귀농귀촌 상담 및 정보 제공	1 단계
금융·대출	후계축산인육성지원 교육	「농협 한우전문교육과정」 운영(한우사육 이론, 현장실습, 견학 등). 청년귀농 장기교육과정 지정, 청년농 교육비 국고지원(연 20명)	1 단계
	승계농 대상 후계농 교육	농촌활력화 승계농 교육과정 운영. 낙농후계자 양성과정 운영. 가업승계 청년농 대상 경영 전환 지원 연계	1~2 단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농협은행·지역농축협이 정책자금 취급 창구. 연 1.5% 고정금리, 최대 5억 원, 5년 거치 20년 상환. 농신보 95% 보증 연계	1~2 단계
	조합원 금융서비스	조합원 가입 후 농자재 구매 할인, 농협카드 바우처 사용, 각종 공제·복지 서비스 이용 가능. 청년 조합원 출자금 할인 적용	전 단계
	청년농 보증 지원(농신보)	담보력 미약한 청년농 보증지원 강화. 우대 프로모션·보증한도 상향·예외보증 운영시한 연장. 찾아가는 현장보증센터 운영. 스마트팜 사업자 신용보증 포함	1~2 단계

p.22

청년농에게 농협은.....

〈농협의 청년농 관련 주요 사업 현황(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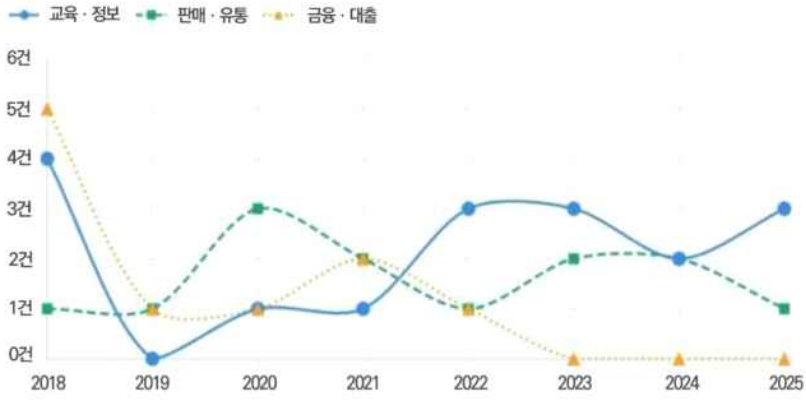
기능	사업·제도명	주요 내용	해당 단계
판로·유통	하나로마트·로컬푸드 직매장	지역 농산물 직거래 판로 제공. 소규모 청년농 산지 직거래 연계	3단계
	농협몰·라이브커머스	농협몰 온라인 판매 입점 지원, 라이브커머스 운영. 사관학교 졸업생 우선 연계	2~3단계
	공판장·수출 연계	농산물 공판장 출하, APC(산지유통센터) 연계 선별·포장 지원. 지역농협 수출 연계	3~4단계
	농식품크라우드펀딩	창업농지원센터·NH투자증권이 협력하여 청년농업인의 판로개척 지원(네이버 해피빈 펀딩)	2~3단계
네트워크·커뮤니티	청년농부사관학교 졸업생 품목별·지역별 커뮤니티	청년농부사관학교 졸업생 대상 품목별·지역별 커뮤니티 운영. 정보 교류·협업·공동 마케팅 지원	3~4단계
	한국농수산대학교 MOU 연계	2025년 4월 한농대와 MOU 체결. 한농대 졸업생 농협몰·하나로마트 유통망 연계, 농기계·교육시설 지원	1~3단계
	올해의청년농업인상	연 20명 선정. 창농회·멘토링·간담회·선진농업연수 등 지원. 우수 청년농 발굴 및 동기부여 기능	전단계

※ 출처: 농협중앙회 내부 자료 및 각 사업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자 정리

p.23

청년농에게 농협은.....

〈농협 역할 유형별 연도별 언급 건수 추이(2018~2025)〉



※ 출처: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우수사례 수기 209건(2018~2025) 분석 결과

- **수기 209건을 분석한 결과, 농협에 대한 언급 총 43건(20.6%):**
  교육·정보 17건(39.5%)
  판매·유통 12건(27.9%)
  금융·대출 10건(23.3%) 순
- **금융·대출 언급은 2018년 5건에서 2022년 이후 0건으로 급감:**
  담보 장벽 등으로 인한 접근 좌절이 누적되면서 청년농이 농협 금융을 의미 있는 지원으로 언급하지 않게 된 결과로 해석

p.24

현장의 목소리 – 지원 공백과 접점 부재

> 3년간 지원해주고 나면 끝!
> 실질적인 지원은
> 그때부터 진짜 필요한데.....
>
> 청년농업인 E, 심층면담, 2026

> 농축협에 가도
> 누구한테 물어봐야 할지,
> 어디부터 연락을 해봐야 할지.....
> 그 시작점을 모르겠어요.
>
> 청년농업인 F·M, 심층면담, 2026

제도와 기능은 존재하나, 위기 구간과의 연결 고리 미약

- 청년농이 가장 어려운 시기에 실질적 조력자를 만나지 못하고 있음
- 접근 경로 자체를 모르는 청년농도 다수 존재

p.25

Ⅰ 연구 개요

Ⅱ 청년농업인의 영농 정착 유형과 단계별 경로

Ⅲ 영농 정착 과정의 구조적 공백

Ⅳ 정착의 조건: 연결 중심 지원체계

p.26

정착의 조건을 만드는 3가지 과제

1. 정착 단계 사후관리의 제도화

- 지원 종료 시점의 경영 진단과 1~2년 브릿지 프로그램을 사업 설계에 내장 – 지원 종료가 관계 종료가 되지 않는 구조로 전환
- 위기 구간에는 무담보 소액 긴급자금 패스트트랙과 상시 모니터링 운영

2. 유형별 맞춤 지원 트랙

- 승계/비승계 & 영농 지향성을 반영한 지원 설계 – 판로·관계망·기술 사업화·세대 중재·후속 금융 등 유형별 수요 상이
- 승계농에는 경영 이양 공식화 지원 병행(역할·대가 문서화 미비 76.9%, 신용광 외, 2024). 무형 노하우의 기록·관리 체계화

3. 전달 체계 통합과 현장 조직 활용

- 기관별 분산 지원의 원스톱화 – 청년농 입장에서 어느 접점에서 출발하든 창구가 하나로 연결되는 구조
- 농축협·농업기술센터·청년농 네트워크 등 기존 전달망을 연결 플랫폼으로 활용 – 농협 역시 정착 지원 플랫폼으로 전환

제1차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 내년 종료, 제2차 수립 논의의 적기

p.27

앞으로 농협은.....

〈 농협 기반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체계도 〉

유형별 맞춤 지원

비승계 청년농(①②③)

① 전략적 창업형: 판로 조기 연계·특화 금융 평가 기준 마련
② 로컬·가치 지향형: 로컬푸드 채널·정보 중개 기능 강화
③ 전문기술 개척형: B2B 연계·기술 사업화 컨설팅 지원

승계 청년농(④⑤⑥)

④ 혁신 전환형: 세대 전환 상담·혁신 사업계획 금융 반영
⑤ 규모 확장형: 후속 금융·법인 설립 컨설팅·유통망 연계
⑥ 가업 수호형: 무형 자산 이전 공식화·경영권 이전 지원

위기 구간 개입

지역농축협 전담 상담역 지정
긴급 경영안전자금 패스트트랙
SOS 멘토링 체계 연계
지원 종료 이후 브릿지 지원

자원 연결

교육·취업·금융·판로 패키지 연계
청년농 특화 금융 평가 기준
농지·정보 중개 기능 강화
청년농 출자금 우대 범농협 확대

관계 연결

영농 유형별 선배 사례 아카이브
세대 전환 동반 상담 체계
청년농 자생 네트워크 및 지역 조직 연계
단계별 지원 이력 관리 체계

농협 기반 청년농 영농 정착 지원 플랫폼

창업농지원센터 → 청년농종합지원센터로 확대·개편

p.28

앞으로 농협은.....

> “ 아이돌·아티스트에게 전담 지원 조직이 함께하듯이,
> 농협이 청년농의 영농 과정 전반을 지원해주는
>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청년농업인 A, 심층면담, 2026

p.29

감사합니다.

p.30

주제발표

3

어업인 고령화에 따른 수협 조합원 감소 대응방안

수협수산경제연구원 박지훈 연구위원

초고령화 시대, 농어촌·농어업
지속발전을 위한 정책포럼



어업인 고령화에 따른 수협 조합원 감소 대응 방안(제도측면)

2026년 9월 9일(수)

박지훈

수 협 중 앙 회
수산경제연구원

Contents

어업인 고령화에 따른 수협 조합원 감소 대응 방안

Ⅰ 검토배경

Ⅱ 수협 조합원 내·외부 주요 현황 검토

Ⅲ 정성·설문조사 주요 결과

Ⅳ 수협 조합원 감소 대응 방안(제도측면)

Ⅰ 검토 배경

p.3

검토배경

- 우리나라 저출산율 등으로 어가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 가속화
- 어업인으로 구성된 수협 조합원 수 지속 감소로 수협의 존립기반 및 어촌·어업 지속가능성 위기의식 증대

조합원 가입 증대 방안 모색 필요성 대두

【조합원 수와 고령화율(60세 이상) 추이】



주) 법인 제외
자료 : 수협중앙회 회원지원부 원자료 가공

p.4

Ⅱ 수협 조합원 내·외부 주요 현황 검토

1. 수협 조합원 주요 현황
2. 수협 조합원 제도 개요

p.5

1. 수협 조합원 주요 현황

1) 우리나라 인구구조 변화 추세

키워드: **"저출산", "고령화"사회**

- 1960년 유소년층이 두터운 삼각형 ⇒ 2025년 30~50대가 두터운 항아리형 ⇒ 점차 60세 이상이 두터운 역삼각형으로 변화



자료 : 전자정부 통계지리정보서비스(https://sgis.go.kr), 검색일: 2026.08.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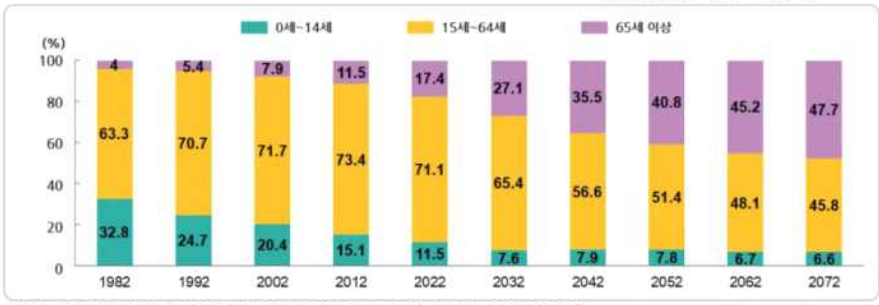
p.6

▪ 우리나라 인구 고령화율(65세이상)*은 2025년 기준 20.6%**로 이미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

* UN 고령화율 기준 : 고령화사회(65세이상 14%이상), 초고령사회(20%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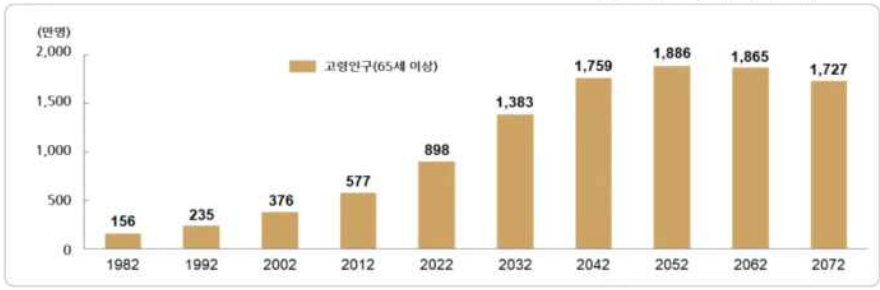
** 2024년 19.2% → 2025년 20.6%

【연령계층별 인구 구성비】



자료 : 국가데이터처 장래인구추계 각 연도 원자료 가공(검색일: 2026.08.20)

【연도별 고령인구수 추이】



자료 : 국가데이터처 장래인구추계 각 연도 원자료 가공(검색일: 2026.08.20)

p.7

Ⅱ 어업인 고령화에 따른 수협 조합원 감소 대응 방안
수협 조합원 내·외부 주요 현황 검토

▪ 우리나라 저출산율, 이미 세계 최하위 1위 지속(세계 198개국 중 198위)

· 2024년 기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0.75명(OECD 평균 1.43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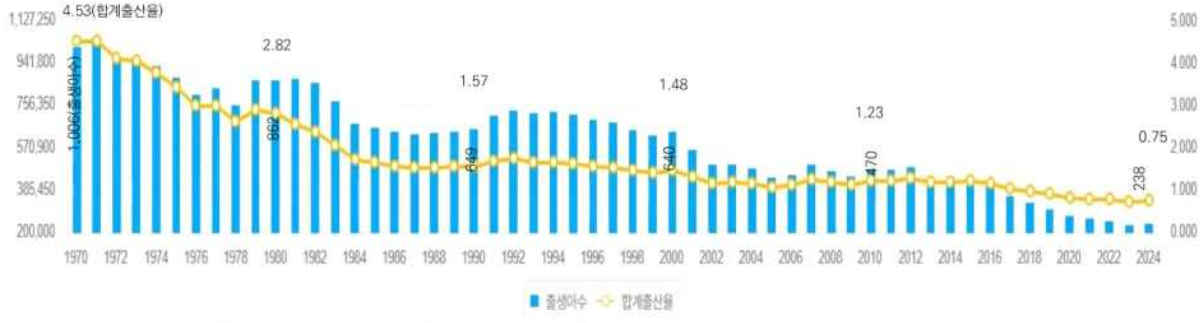
* 합계출산율(TFR, Total Fertility Rate) : 가임기 여성(15~49세) 1명이 가임기간(15~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 자료 :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970년 4.53명에 달했으나, 2024년엔 1명 이하로 추락

· 합계출산율 추이: 1970년 4.53명 ⇒ 1980년 2.82명 ⇒ 1990년 1.57명 ⇒ 2000년 1.48명 ⇒ 2010년 1.23명 ⇒ 2024년 0.75명

(출생아수: 천명) 【우리나라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추이】 (출산율: 가임여성 1명당 명)



자료 : 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조사 각 연도 원자료 가공(검색일: 2026.01.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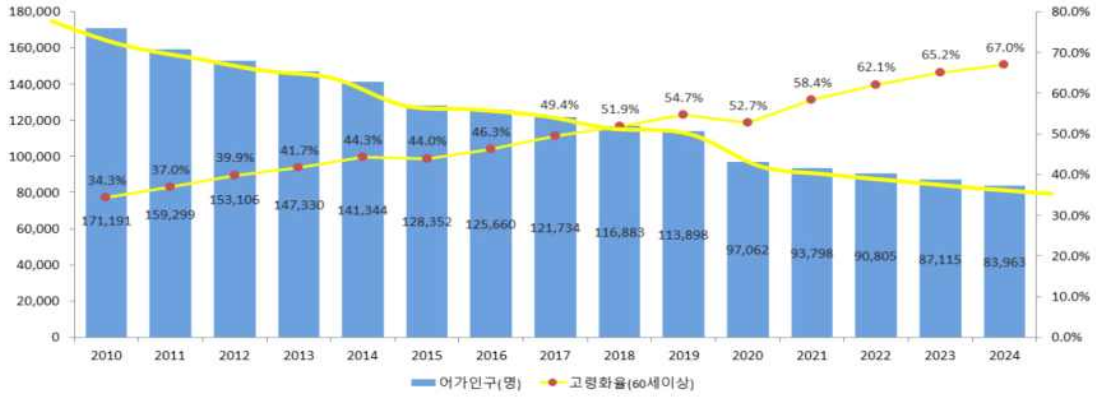
p.8

2) 우리나라 어가인구 추이

2024년 어업인 고령화율(60세 이상) **67.0%**

- **우리나라 어가인구 지속 하락, 동시에 어업인 고령화율(60세 이상)은 가속화**
  - 2024년 어가인구는 15년 전 대비, 약 51% 감소(17.1만 명 ⇒ 8.3만 명),
  - 고령화율 2010년 34.3% ⇒ 2024년 67.0%, 약 100% 증가

【우리나라 어가인구와 고령화율 추이】 (단위 : 명)



자료 : 국가데이터처 농림어업조사, 농림어업총조사 각연도 원자료 가공(검색일: 2026.08.20)

p.9

3) 수협 조합원 주요 현황

- **수협 조합원 수, 저출산 및 고령화의 영향 등으로 최근 10년간 지속 감소 추세**
  - 2025년 수협 조합원 수 14만 8,090명으로, 지난 10년 전 대비 조합원 수 1만 2백여 명 감소(6.5% 감소)
- **매년 탈퇴 조합원 》 가입 조합원을 상회함에 따라 전체 조합원수가 감소하는 추세**
  - 최근 10년 누적 가입 조합원의 수는 5만 8,208명 여명인 반면, 탈퇴자 수는 6만 8,627명으로 1만 여명의 조합원이 감소

*청년연령 기준: 40세 미만(UN 기준)

- **신규 조합원 중, 54.8%는 60세 이상 고령 조합원. 반면, 40세 미만 청년* 조합원은 겨우 7.8% 남짓**

【최근 10년 조합원 수 추이】



주) 남여비의 나머지는 법인의 비중임(연도별 약 0.3%~0.4%)
자료 : 수협중앙회 회원지원부 원자료 가공

【조합원 가입/탈퇴 현황】

구 분	조합원수	가입 (a)	임의탈퇴 (b)	정비 계 (c)	당연탈퇴			순가입 (a-b+c)
					무자격자	사망	파산 등	
2016	158,298	5,757	1,864	4,104	2,257	1,800	47	-211
2017	158,819	6,011	1,594	3,896	1,624	2,114	158	521
2018	158,623	7,881	2,018	6,059	2,704	3,123	232	-196
2019	157,300	6,050	2,356	5,017	2,720	2,249	48	-1,323
2020	154,870	5,933	2,041	6,322	4,214	2,083	25	-2,430
2021	153,678	6,489	1,697	5,984	3,771	2,164	49	-1,192
2022	153,629	6,911	1,397	5,563	2,872	2,650	41	-49
2023	152,692	5,557	1,627	4,867	2,770	2,049	48	-937
2024	150,293	4,011	1,544	4,866	2,826	1,976	64	-2,399
2025	148,090	3,608	1,616	4,195	2,023	2,138	34	-2,203
계	1,546,292	58,208	17,754	50,873	27,781	22,346	746	-10,419

주) 파산 등 : 파산한 경우, 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 설립한 법인이 해산한 경우임
자료 : 수협중앙회 회원지원부 원자료 가공

p.10

▪ 수협 조합원 수는 지속 감소하는 반면, 조합원 **고령화율**(60세 이상) 지속 증가 추세

· (2016) 고령화율 61.2% → (2025) 75.3%, 지난 10년전(61.2%) 대비 14.1%p 증가

· 2024년 기준 수협 조합원의 고령화율(60세 이상)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고령화율(30.1%) *보다 **44.1%p ↑**, 어업인 고령화율(67.0%)보다 **8.3%p ↑**

*우리나라전체인구의고령화율기준은65세이상으로비교에는한계가있음

【조합원 고령화율(60세 이상) 추이】

(단위 : 명, %)



주) 법인 제외
자료 : 수협중앙회 회원지원부 원자료 가공

p.11

2. 수협 조합원 제도

1) 수협 조합원의 자격 요건

▪ 수협 조합원의 자격요건 법적 근거 : 「수협법」을 근거로 여러 법을 준용

・「수협법」,「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수산업법」,「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식산업발전법」

【수협 조합원 자격요건 요약】

구분	자격요건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제20조)	・조합원은 지구별수협의 구역에 주소,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어업인*으로서 1년 중 60일 이상 조합정관이 정하는 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어조합법인(동법 제16조)과 어업회사법인(동법 제19조)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지구별수협의 구역에 두고 어업을 경영하는 법인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제106조)	・조합원은 업종별수협의 구역에 주소,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자로서 1년 중 60일 이상 「수협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어업을 경영하는 어업인 * 외끌이대형저인망 등 해면어선어업, 해면양식어업, 내수면어선업·양식업, 소금생산업('25.5.7.개정) 총 20개 종 ※업종별수협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 중, 단일 어업을 경영하는 자는 해당 업종별수협에만 가입. 단, 단일어업을 경영하는자는 지구별수협에 가입가능(대법원 '10.4.29 선고 2009다101862판결)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제111조)	・조합원은 수산물가공수협의 구역에 주소,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자로서 「수협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을 경영하는 자 *수산물 냉동냉장업, 수산물통조림가공업, 수산물건제품가공업(공장면적 330㎡이상), 해조류가공업(공장면적 200㎡이상)을 경영하는자

p.12

2) 조합원 자격제도 비교

구분	수협	농협	산림조합
자격 요건	·지구별수협의 구역에 주소,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어업인 ·법인(영어조합법인, 영어회사법인)	·지역농협 구역에 주소,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 ·법인(영농조합법인, 영농회사법인)	·지역조합 구역에 주소 또는 산림이 있는 산림소유자 · 지역조합 구역에 주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임업인
요건 범위	(어업인의 범위) · 1년 중 60일 이상 조합의 정관에서 정하는 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 ※ 경영자, 종사자 통합 규정 ※ 기간요건 경영자, 종사자 모두 적용	(농업인의 범위) 조건모두 충족시 ·1천㎡ 이상 농지를 경영(작)하는자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자 · 일정기준 이상 누에, 가축, 원예, 채소, 과수, 화훼를 재배하는자 ※ 경영자, 종사자 분리규정 ※ 기간요건 : 종사자만 적용	(임업인의 범위) 어느 하나에 충족 시 ·3ha이상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자 ·1년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자 ·연간 임산물 판매액 120만원 이상 자 ·일정기준 이상 종묘, 조경수, 분재소재, 산림부산물, 대추·호두·밤·잣나무, 표고자목 생산자 ※ 경영자, 종사자 분리규정 ※ 기간요건 : 종사자만 적용
중복가입 제한	둘 이상 지구별수협에 중복 가입 불가	둘 이상 지역농협에 중복 가입 불가	둘 이상 지역조합에 중복 가입 불가
조합원 자격 예외적 인정	규정 없음	· 농지 수용 또는 매매, 전염병에 의한 살처분, 천재지변 등 발생시 자격 유예 · 최대 1년 초과 금지	규정 없음
복수(가족)조합원 가입여부	복수조합원 가입가능(단, 어업에 참여)	복수조합원 가입가능(단, 지역농협만, 농업에 참여)	복수조합원 가입 불가
조합원 제도	조합원, 준조합원	조합원, 준조합원, 약정조합원, 명예조합원(준조합)	조합원, 준조합원
조합원가입이사회의결	O	X(담당 업무자)	O

자료 : 면접·유선인터뷰 조사결과, 농협·산림조합중앙회 제공자료, 법제처 법규정 참조

p.13

Ⅲ 정성·설문조사 주요 결과

1. 정성조사 개요 및 주요 결과
2. 설문조사 개요 및 주요 결과
3. 시사점

p.14

1. 정성조사 개요 및 주요 결과

1) 정성조사 개요

구분	주요 내용
조사목적	○ 회원조합 조합원 감소 실태 파악 ○ 조합원 감소 대응 방안 단서 도출 ○ 설문조사 조사 항목 개발
조사방법	1:1 심층면접조사(In-depth interview)
조사대상 선정	①권역별 배분, ②조합원수 규모, ③조합원 가입·탈퇴 규모, ④이슈 발생 조합 등
조사대상 (8)	① 경인권 : OO수협 ② 충남권 : OO수협, OO수협 ③ 전북권 : OO수협 ④ 전남권 : OO수협 ⑤ 경남권 : OO수협 ⑥ 경북권 : OO수협 ⑦ 강원권 : OO수협
조사 주요 내용	① 조합원 일반현황 ② 조합원 감소(원인) 실태 ③ 조합원 가입 실태 ④ 조합원 탈퇴 실태 ⑤ 조합원 가입(증대) 자구 노력 ⑥ 조합원 가입(증대) 장벽 및 니즈(제도·운영)

p.15

2) 정성조사 주요 결과

【조합원 가입(증대) 주요 장벽 및 니즈 종합(중복 제외)】

장벽	니즈
조합원 자격 "어업인의 범위" 매우 협소	어업인의 범위 확대하여 조합원 감소에 적극 대응
맨손어업의 경우, 조합원 자격 기간요건(60일)을 증명할 수 있는 제출서류 부재(현 신고필증으로만 판단)	수협법 조합원 자격 기간요건 삭제 및 대체
조합원 자격 기간요건(60일), 대법원 판례(장래 어업을 경영할 것이라는 사회통념상 또는 객관적 명백한 경우 조합원 자격인정)에 의해 조합원 가입여부 판단 시, 행정적 혼란만 야기	수협법 조합원 자격 기간요건 삭제 어업경영자와 종사자 구분하여 종사자게에만 기간요건 적용
어업종사자의 조합원 자격요건, 제도적으로 매우 제한적 (현, 수산업법에 근거 어획·포획·양식어업에 종사자로 한정)	어업종사자 조합원 자격 범위 확대
비조합원의 조합원 가입의 핵심 장벽은 "반환 출자금 보전"의 불확실성	조합원 탈퇴 시 반환 출자금 보전, 제도적으로 마련요구
어선감척으로 무자격 탈퇴 조합원 지속 늘어나는 추세	감척으로 인한 조합원에 대해 조합원 자격 한시적 인정 요구
청년조합원의 경우 조합원 가입 장벽은 출자금 부담	청년조합원 대상 출자금 부담 완화책 모색(예: 출자금 할부제 도입)
조합원 가입에 대한 이사회 의결 절차가 조합원 증대의 걸림돌	조합원 가입 여부판단을 해당 담당직원이 결정
비조합원 대비 조합원 차별유인 부재	조합원 대상 정책자금 금리 우대

p.16

2. 설문조사 개요 및 주요 결과

1) 설문조사 개요

【조합원 자격 확대 적정성 검토(확대 범위 수용도)】

주요 내용
▪ 조사목적 : 조합원 자격 확대 및 범위의 적정성 검토 ▪ 조사대상 : 91개 수협 회원조합의 조합원 관리 담당 임직원(응답수 195명, 모집단(91개조합당 3명)대비 72%
▪ 조합원 자격(어업인) 확대범위 설정 : 「수산업법」,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업통계조사」, 「해양수산업특수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서 '수산인', '어업인', '수산업 종사자'로 정의 및 분류된 분야(업종)를 도출
▪ **조합원 자격 확대 범위(5개 범주-38개 세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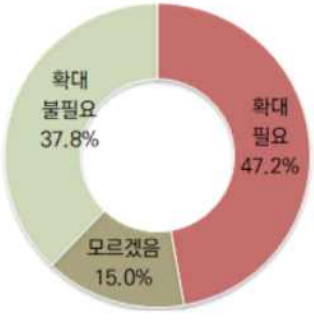
구분(5개 범주)	세분류(38개)
① 수산업 후방 연관산업	8
② 수산물 생산 관련업	4
③ 수산물 유통업	11
④ 수산물 가공업	5
⑤ 수산물 기타 서비스업	10

p.17

2) 설문조사 주요 결과

가. 조합원 자격 범위 확대 필요성

【조합원 자격 범위 확대 필요성】



[Base : 전체 180명(무응답 15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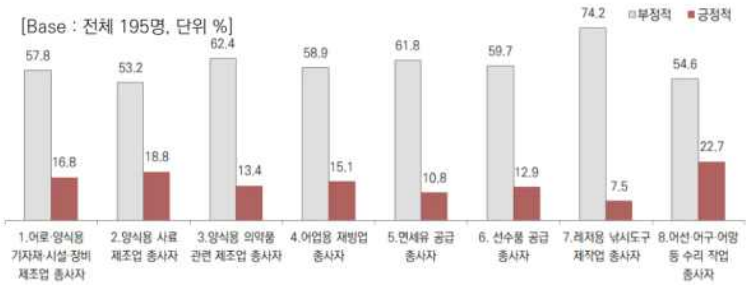
나. 조합원 자격 확대 범위의 적정성(수용도)

① 수산업 후방연관산업

▪ **후방연관산업 모두 분야 대해 조합원 자격으로 수용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응답**

- 8가지 각 분야에 대한 부정과 긍정의 비율의 차이가 큼
- 조합원 수용정도가 가장 큰 분야는 '레저용 낚시도구 제작업 종사자'

【조합원 자격 확대 범위 수용도(수산업 후방연관산업)】



주) "종사자"함은 해당 업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자, 법인(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을 통칭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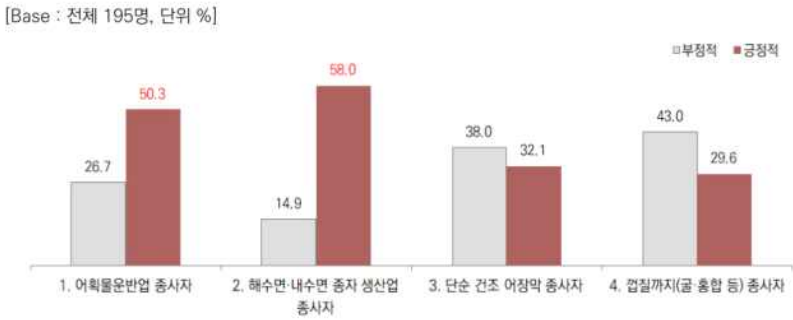
p.18

나. 조합원 자격 확대 범위의 적정성(수용도)

② 수산물 생산 관련업

- 앞서 후방연관산업과 달리, 수산업 생산관련업에서는 긍정과 부정의 비율 차이가 줄어듦
- 조합원으로 포함하는 것에 긍정적인 분야는 **'어획물운반업종사자','종자생산업 종사'**

【조합원 자격 확대 범위 수용도(수산물 생산 관련업)】



주) "종사자"함은 해당 업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자, 법인(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을 통칭함

p.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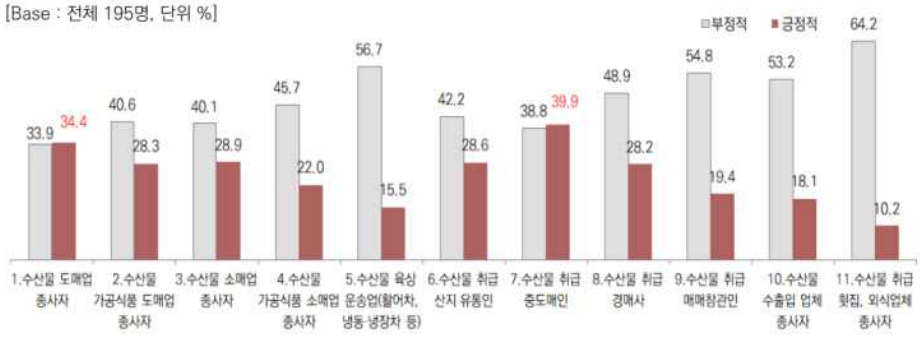
Ⅲ 어업인 고령화에 따른 수협 조합원 감소 대응 방안
정성 · 설문조사 주요 결과

나. 조합원 자격 확대 범위의 적정성(수용도)

③ 수산물 유통업

- 조합원 자격에 포함될 수 있는 분야는 **'수산물 취급 중도매인', '수산물 도매업 종사자'**
  - 그러나, 부정적 의견 비율과 그리 차이가 없어 해당 분야를 조합원 자격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조합원 자격 확대 범위 수용도(수산물 유통업)】



주) "종사자"함은 해당 업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자, 법인(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을 통칭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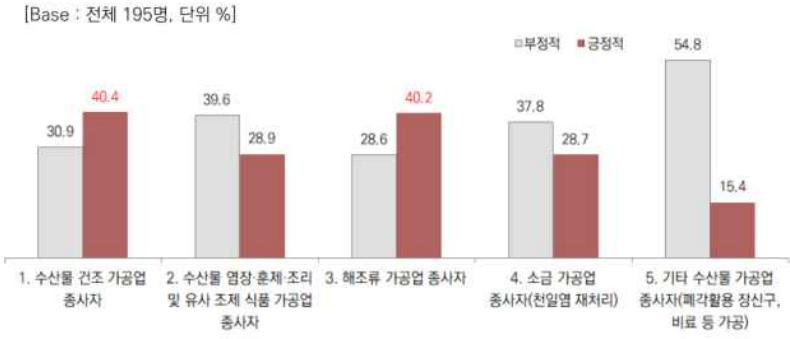
p.20

나. 조합원 자격 확대 범위의 적정성(수용도)

④ 수산물 가공업

▪ 조합원 자격에 포함될 수 있는 분야는 **'수산물건조가공업 종사자', '해조류가공업종사자'**

【조합원 자격 확대 범위 수용도(수산물 가공업)】



주) "종사자"함은 해당 업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자, 법인(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을 통칭함

p.21

Ⅲ 어업인 고령화에 따른 수협 조합원 감소 대응 방안
정성 · 설문조사 주요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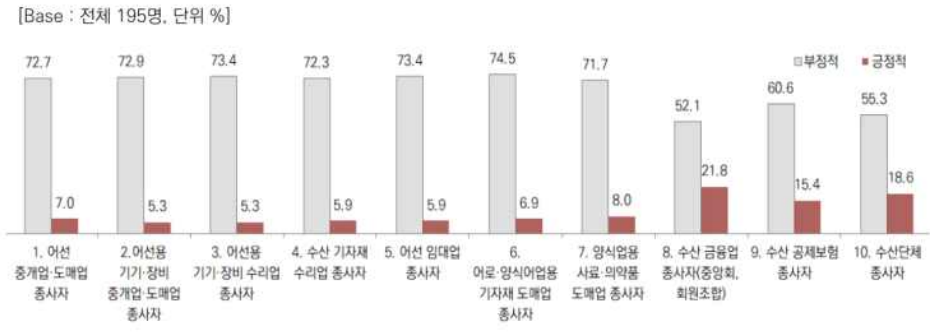
나. 조합원 자격 확대 범위의 적정성(수용도)

⑤ 수산업 기타 서비스업

▪ 기타 **서비스업 모든 업종**, 조합원 자격범위에 **포함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응답**

- 조합원 자격 수용성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음

【조합원 자격 확대 범위 수용도(수산업 기타 서비스업)】



주) "종사자"함은 해당 업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자, 법인(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을 통칭함

p.22

3. 시사점

- **조합원 자격범위 확대 필요. 그러나 확대 범위는 조합의 수용성을 고려해 신중히 접근 필요**
  - 조합원 자격범위 확대를 찬성하지 않는 이유는 수협 정체성 희석에 대한 우려
- **수산업의 환경적 영향 요인을 고려, 조합원 자격 예외적 인정 제도적으로 마련 필요**
  - 수산업의 경우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1차산업
  - 기후변화에 의한 특정 업종의 조업중단·폐업, 어선감척 등으로 어업인 자격상실, 조합원 탈퇴 증가 추세
- **조합원 자격요건인 기간요건(연중 60일) 이외, 일정 "판매액 기준" 포함 검토 필요**
  - 최근 기후 변화 등으로 인한 어업환경 변화로 조업 기준 일수 채우기 힘든 상황 빈번히 발생
  - 조합원 자격요건을 '기간요건'으로만 제한 → 조합원 가입 및 유지 문턱 높아지는 요인으로 작용
- **신규조합원 유입 촉진은 비조합원과의 차별적인 혜택이 강화될 때 가능**
  - 유일한 조합원 혜택은 출자금을 납부한 대가에 대한 배당, 조합사업 이용, 환원사업 혜택이 전부
- **조합원 감소 대응 방안의 원천은 결국, 정부의 '어촌인구, 귀어 신규인력 유입 정책의 성과'와 직결**
  - 어가인구 감소, 어촌 신규인력 유입 저조 등으로 인한 조합원 감소는 자연스러운 현상

p.23

Ⅵ 수협 조합원 감소 대응방안(제도측면)

p.24

1. 조합원 자격 범위 확대

- 현행 수협법 규정 조합원 자격 범위인 '어업인'의 범위 매우 협소
  - 1962년 수협법 제정 당시~현재까지 약 65년 동안 조합원 자격요건 유지(불변)
- 이와 대조적으로, 농협과 산림조합의 경우 조합원 자격 범위 폭넓게 인정
  - 농협 (농업인의 범위) : 농업, 축산업, 화훼업, 과수업, 채소업 이외, 누에, 장수풍뎅이 등 곤충업까지 확대
  - 산림조합(임업인의 범위) : 임업 외, 조경수, 분재소재, 산림부산물 재배자까지 인정
- 현장 의견청취 결과, 조합원 자격 확대 필요성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

- **조합의 수용성을 고려하여 조합원 자격범위 확대 신중히 검토 필요**
  - **우선순위를 고려한 점진적 확대 모색**

p.25

VI 어업인 고령화에 따른 수협 조합원 감소 대응 방안
수협 조합원 감소 대응 방안

2. 조합원 자격 예외적 인정 방안 마련

- 기후변화, 정부정책 등 다양한 외부적 환경에 의해 어업인으로서 자격상실 사례 다수 발생
  - 정부의 고강도 어선감척, 기후변화에 의한 특정업종 조업중단으로 조합원 자격요건 상실
- 농협의 경우, 조합원 자격의 예외적 인정 규정을 통해 지역조합 활성화 및 조합원 감소에 적극 대응
  - 농지, 토지, 건물의 수용이나 일시적 매매, 가축의 살처분, 천지재변 등 불가피 한 사유 시 조합원 자격 인정
- 일시적으로 어업인의 자격을 잃게 되는 경우, 조합원 자격을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 조합원 감소에 적극 대응 필요

- **조합원 자격 예외적 인정제도 도입 모색**

p.26

3. 조합원 자격요건 완화

- 수협 조합원의 자격요건인 어업인의 범위는 "1년 중 60일 이상" 이라는 "기간요건"을 충족해야만 조합원 인정되는 구조
- 그러나, 최근 기후변화 등 으로 인한 어업환경 변화로 조업 기준 일수 채우기 힘든 상황
  - (예) 제주 해녀의 경우 노령으로 60일 이상 기간 요건 충족 못해 조합원 자격 여부에 대한 혼란 발생
  - (예) 맨손어업은 기간 요건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부재로 조합원 자격 여부에 대한 행정적 비용 발생
- 조합원 자격요건인 어업인 범위를 "기간요건"으로만 규정하다 보니, 조합원 가입·유지 문턱 높아지는 요인으로 작용
  - (예) 산림조합 조합원 자격요건 : 기간요건(90일), 판매액 요건(120만원 이상) 어느 하나만 충족하면 조합원으로 인정 → 자격요건 완화

- **조합원 자격요건의 기간요건(연중 60일) 외, "일정 판매액 기준" 포함 검토**

p.27

VI 어업인 고령화에 따른 수협 조합원 감소 대응 방안
수협 조합원 감소 대응 방안

4. 조합원 혜택 차별화 강화

- 조합원 감소 대응 위해 신규조합원의 유입 절실, 이는 비조합원이 가질 수 없는 조합원 만의 편익 존재할 때 효과적
- 현장 의견청취 결과, 신규조합원 유입 장벽 중 하나는 비조합원과 조합원의 차별적인 혜택이 없다는 점
- 조합원 만의 차별적 혜택이 주어질 경우, 신규조합원 유입을 촉진해 효과적으로 조합원 감소에 대응 가능
  - 현재로선 조합원 혜택은 출자금을 납부한 대가에 대한 보상이 전부(사업 이용편익, 배당, 조합원 환원사업)

- **주요 수산정책자금 이차보전 및 융자에 대해 조합원 우대금리(=금리인하) 반영**

p.28

어업인 고령화에 따른 수협 조합원 감소 대응 방안

감 사 합 니 다.



p.29

종합토론

【좌장】 **김한호** 명예교수 (서울대학교)

토론문

솔온팜 대표
장 지 훈

□ 우선 제 소개에 앞서 오늘 현장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주철현 국회의원님과 농협중앙회 그리고 수협중앙회 관계자 여러분들, 발표를 해주신 전문가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저는 충북 음성군 금왕읍에서 스마트농장 솔온팜을 운영하고 있는 청년농부 장지훈입니다.

○ 2013년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국농수산대학교 채소학과를 2016년도에 졸업하고 바로 귀농하여 토마토 스마트팜을 운영하고 있는 청년농부이기도 합니다.

○ 지역에서는 최근까지 음성군 청년농업인 4-H연합회장을 맡아 지역리더로서의 역할도 함께 수행하였습니다.

○ 지역활동을 하다 보니 현장에서 청년농업인들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도 자주 접할 수 있었고, 저 또한 청년농업인으로서 스마트팜 농장을 실제로 운영하다 보니 영농현장에서 실제로 부딪히는 여러 문제들을 직접 몸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 저는 오늘 이 자리가 행사를 위한 일회성 이벤트성 행사가 아니라 실제 현장의 청년농어업인들의 고충을 듣고 해결 방안을 조금이나마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과 희망을 가지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첫째, 청년농의 성장 단계별 육성 관련하여 현장의 애로사항과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 1년에서 3년 정도의 진입단계에 있는 청년농업인의 경우 ①초기 자본조달과 ②낮은 농업소득, ③영농기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년 지역별 차이가 있긴 하지만 후계농업경영인 대출만으로 농업을 시작하기에는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스마트팜 1000평짜리 하나를 지어서 운영 하려면 얼마의 투자금액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지역별 차이가 있는

토지매매값은 제외를 하고도 평당 100만원에서 족히 150만원에 상이하는 시설비를 청년농업인들은 20년간 감당해야 합니다. 스마트팜 종합자금 대출이라는 농협 제도가 있긴 하지만 이마저도 결국은 젊은 농업인들이 값아야하는 빚으로 정부 지자체는 현재 임대형 스마트팜 보급만 힘쓰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볼 때 임대형 온실보다는 단 한명의 청년농을 정착시키는 지원사업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농협 또한 농가 규모에 적합한 금융지원프로그램이 가미된다면 더욱 성과가 날 것 같습니다. 특히, 종합농협으로서의 장점을 살려서 농협이 역할을 제대로 한다면 “어려울 때 힘이 되는 농업인을 위한 농협” 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둘째, 농산물 판로에 관한 어려움에 대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현재 많은 농업인들이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을 직판하는 양보다 시장에 출하하여 경매를 보는 양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의 경매 경락가와 실제 소비자가 구매하는 농산물의 가격에서 차이가 너무 심하게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수박 한 통의 값이 경락가는 15,000원이지만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가격은 30,000원입니다. 중간의 유통과정이 길다보니 생기는 현상 같은데 결국 이렇게 되면 소비자들은 농산물이 비싸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고 소비가 줄면 자연스럽게 농업인들이 받는 경락가도 하락하는 것이 너무 불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 셋째, 기후위기에 따른 피해와 어려움이 청년농업인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가혹할 만큼 영향을 주고 있어서 정부의 통 큰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기름값보다는 전기값이 저렴하던 이전과는 다르게 발전연료의 급등, 환율 상승 등 여러 이유로 매년 전기세가 오르고 있는데, 기후위기에서 전기세의 상승은 농업인에게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 인 것같습니다.

여름철 고온 다습한 상태에서는 농장 내 온도를 낮추기 위해, 겨울철은 온도를 높이는 데 1년 농사의 사활이 걸려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다 보니 청년농업인들은 경영비 증가와 더불어 인력부족, 판로부족 등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기후변화의 악조건에서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현실

적인 장벽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보급 확산의 성과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기후위기로 인한 전기료 상승의 대응 정책 등 보다 정밀하고도 세밀한 정책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 넷째, 영농정착에 실패한 청년농업인을 위한 “재기・재도약 프로그램” 도입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 농업에 관심이 있고 농촌생활이 좋아서 신규 진입한 청년농업인이 정착 초기, 한 번의 실패로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반이 없어 농업, 농촌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비일비재 합니다. 영농정착에 실패할 경우 대부분 탈농 또는 이농으로 이어지고 있으나 이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발판은 미흡합니다.

농업부문은 환경 및 계절적 요인에 민감한 산업이다 보니 정착 초기 부족한 기술, 자본, 낮은 소득 등으로 청년농업인은 상대적으로 실패할 가능성이 훨씬 높은 분야입니다. 그러니 정부정책은 청년농업인 육성에 중점을 두고 유인, 정착에 방점을 두다 보니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정착에 실패한 청년농업인이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자금지원, 생산기반 조성, 품목 재선정, 기술교육, 맞춤형 컨설팅 등의 사다리를 놓아주셨으면 합니다.

참고로 농지은행의 경영회생지원사업은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매입하고, 매각 대금으로 농가가 부채를 갚도록 한 후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나, 농지 등의 생산기반이 부족한 청년농업인에게 있어서는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 농업, 농촌 현장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말아주시고 조금만 더 도와주신다면 저희 청년농업인들도 식량안보의 최첨병으로서 사명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발표를 해주신 전문가분들께 다시 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령화가 문제인가, 농민을 재생산하지 못한 농정이 문제인가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엄 청 나

전국농민회총연맹은 농촌 현장에서 고령화와 인구감소를 직접 겪어 온 농민들의 조직입니다. 오늘 발표된 농어촌 인구구조 변화와 청년농 정착의 어려움, 어업인과 수협 조합원 감소에 대한 진단에는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과 같은 추세가 계속될 경우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성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 크게 공감합니다.
다만 논의의 출발점은 분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농촌이 늙어서 농업이 어려워진 것인지, 아니면 농업으로 살아가기 어려웠기 때문에 젊은 사람이 떠났고 그 결과 농촌이 늙은 것인지에 대한 인과관계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1. 고령화는 원인이면서, 동시에 농민을 재생산하지 못한 농정의 결과다

김미복 박사님의 발표에 따르면 농가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비중은 51.3%이고, 농가인구 중위연령은 65.3세입니다. 현재 추세가 이어질 경우 2045년에는 농가 수가 40만 호 이하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동시에 새로운 세대가 왜 농업으로 들어오지 않았고, 기존 농민의 자녀들은 왜 농업을 이어받지 않았는지에 대한 분석도 중요합니다. 오늘 발표자료에는 그 배경을 보여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농업소득은 감소·정체하고 있고 전문농가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도시근로자가구 대비 농가소득 비율도 2000년 79.8%에서 2024년 58.5%까지 낮아졌습니다. 전국 읍·면 분석에서는 시장개방에 따른 농업 쇠퇴가 농촌지역 쇠퇴와 상당 부분 관련돼 있다는 분석도 제시됐습니다.
결국 농촌 고령화는 단순한 인구현상만이 아니라 농업으로 안정적인 소득을 얻기 어려웠고, 다음 세대가 선택할 만한 직업과 삶의 기반이 되지 못했던 과정이 함께 누적된 결과입니다. 따라서 정책도 단순히 고령농을 줄이고 청년농을 늘리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농업으로 살아가기 어려워진 구조를 바꾸는 것에 고민이 실려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KREI가 한 걸음 더 나아간 분석을 해주길 기대합니다. 이번 발표는 농업소득 감소와 시장개방에 따른 농업·농촌 쇠퇴의 연관성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개방과 가격정책, 경쟁력과 규모화 중심의 농정이 농민의 소득과 농촌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까지 객관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 정책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실행할 것인지 연구하는 것과 함께, 정부가 추진해 온 정

책의 방향과 전제가 실제로 타당했는지를 검증하는 것 역시 국책연구기관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2. 청년농 정책은 유입보다 정착이 중요하다.

이 점에서 전경미 박사님의 분석결과를 보면, 청년농의 위기는 농업 진입 이전보다 오히려 영농을 시작한 이후의 적응 단계에 집중됐습니다. 기술 실패와 자금 고갈, 판로 불안, 부채와 지역사회에서의 고립 등이 겹쳤고, 초기투자 이후 실제 수익이 발생하기까지의 공백에서 이탈 위험이 가장 높았습니다.
반면 정부 지원은 주로 영농 초기 단계에 집중돼 있습니다. 청년을 농업으로 불러들이는 지원은 많지만, 정착지원이 종료된 뒤 실제 경영의 어려움이 본격화되는 시기에는 지원이 약해집니다. 시설 도입에 비해 운영과 사후관리 지원이 부족하고, 높은 자부담이 오히려 청년농의 부담으로 작용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이 결과는 청년농 정책을 유입 중심에서 정착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농지 확보와 초기자금 지원도 중요하지만, 실제 영농을 지속할 수 있는 판로와 경영 안정, 소득 전망이 함께 마련돼야 합니다. 청년농 정책의 성과도 몇 명을 선발했는지, 얼마를 지원했는지가 아니라 5년 뒤, 10년 뒤에도 농업에 남아 있는지, 농업을 통해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농지와 금융, 교육과 판로지원 모두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바탕에는 농사를 지으면 먹고살 수 있다는 전망이 있어야 합니다. 농수산물이 제값을 받고 농업소득이 안정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청년 정착정책입니다.

3. 농지는 세대교체의 수단이 아니라 공공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김미복 박사님의 발표에서는 70대 이상 경영주가 농지의 52.1%를 보유하고 있으며, 고령층에 머물러 있는 농업자산의 이용을 청장년층으로 이전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노후소득 안전망을 강화하고 장기임대차 등을 통해 청년농의 농지 이용을 확대하자는 방향에는 공감할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고령농이 농지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농의 진입이 어렵다는 식으로 단순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고령농에게 농지는 생산수단이면서 동시에 노후의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농사를 그만둔 이후의 생활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농지만 먼저 이전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인 해법이 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고령농의 노후소득 보장과 청년농의 농지 접근을 함께 해결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농업인 연금과 퇴직급여를 실질화하고, 농지은행의 공공적 기능을 강화해 고령농이 안심하고 경영을 이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청년농에게는 농지를 반드시 소유하지 않더

라도 장기간 안정적으로 경작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농지가 소수의 대규모 경영체에 집중되지 않도록, 실제 경작자 중심의 공공적 관리 원칙도 분명히 해야 합니다.

4. 농협·수협의 지속가능성은 조합원 숫자보다 조합원 민주주의에 있다

수협 발표에서는 조합원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조합원 자격범위를 확대하거나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동시에 현장에서는 자격범위 확대가 수협의 정체성을 희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문제는 농협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의 지속가능성을 단순히 조합원 숫자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농사짓고 어업에 종사하는 조합원이 협동조합의 주인이 되고 있는가입니다. 농협은 농민이 만든 조직이지만 오랫동안 신용사업 중심으로 비대해졌고, 조합원에게 가장 중요한 농산물 판매와 생산비 절감, 경제사업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청년농에게 농협이 또 하나의 금융기관이나 정책사업의 창구에 머물러서도 안 됩니다. 청년농에게 필요한 농협은 농산물을 함께 팔아주고, 생산비를 낮추고, 가공·유통과 판로를 함께 만들어주는 협동조합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청년과 여성, 실제 농사를 짓는 조합원이 조합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결국 농민이 계속 농민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고령화, 청년농 정착, 농지, 협동조합 문제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농업과 어업을 통해 생활을 이어갈 수 있어야 새로운 사람이 들어옵니다. 고령농에게 안정적인 노후가 보장되어야 농지도 자연스럽게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청년에게 안정적인 농지 이용과 소득 전망이 있어야 정부 지원이 끝난 뒤에도 농업에 남을 수 있습니다.

이런 조건이 갖춰져야 부모 농민도 다음 세대에게 농업을 권할 수 있고, 청년도 일시적인 정부 지원 때문이 아니라 농업을 자신의 직업과 삶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필요한 것은 단순한 세대교체가 아니라, 현 세대의 농민이 다음 세대의 농민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는 농업을 만드는 것입니다.

토론문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
주 영 대

1. 어업 현장 3대 재난과 생존 안전망 구축 시급

ㅇ 현장의 3대 재난 상시화
- 상시화된 고수온·적조 피해
- 면세유 가격 및 인건비 급등
- 수산자원 고갈로 인한 출어 적자 구조 심화

ㅇ 정부 대책 한계 및 상대적 박탈감
- 정부의 단기 소득 보전책 및 유류비 보조 등은 현장 기대에 크게 미흡
- 농업 분야 대비 수산업 예산 및 정책 관심도 소외
- 어촌 공익직불제 및 소규모 어가 지원 등은 여전히 농업 지원 수준을 크게 하회

ㅇ 요구사항 : 화려한 정책 브랜딩 대신 직관적·실효적 소득 및 경영 안전망 강화

2. 귀어귀촌인의 현실적 어촌 안착 및 정착률 제고 대책

ㅇ 현행 정책의 한계 : '유입' 위주 정책으로 인해 정착 과정의 고충 해결 및 도시 재이탈 방지 사후 대책 부재

ㅇ 3대 정착 대책 제안
- 어촌계 진입 장벽 완화 : 청년 및 귀어인을 적극 수용하고 가입 문턱을 낮춘 어촌계에 정부 예산 지원 및 지자체 인센티브 파격 부여
- 맞춤형 정주 인프라 확충 : 귀어귀촌인 전용 임대주택 및 모듈러 주택 공급 확대, 의료·교육 인프라 확충으로 주거 불안 해소
- 1:1 현장 교육 및 멘토링 강화 : 준비 없는 창업 방지를 위해 지역 선배 어업인 연계 현장 기술 교육 및 어촌 공동체 적응 후견인 제도 활성화

3. 수협 조합원 자격 규정 완화 및 어장·어선 관리 구조 개혁

ㅇ 어촌 초고령화 실태 (2025년 기준)
- 수협 조합원 수 : 14만 8,090명 (10년 전 대비 6.5% 감소)
- 신규 가입자 연령 비중 : 60세 이상 54.8% vs 40세 미만 청년 7.8%에 불과

ㅇ 제도 개혁 건의
- 수협 조합원 자격 예외 인정 규정 신설 및 문턱 완화
- 정부 감척 사업 참여자 및 고수온 등 기후 재해 피해 어업인을 위한 자격 유예 규정 신설
- '연간 수산물 판매·위판액 기준' 병행 도입으로 고령 해녀, 맨손어업인, 귀어인 진입 문

턱 완화

ㅇ 어장·어선 관리 구조 전환 (소유 중심→ 이용 중심)

- 소유권과 이용권을 분리하여 청년 임대 조업을 위한 '임대차 자산승계 플랫폼' 구축
- 어업인 연금제도 강화로 고령 어업인의 자연스러운 은퇴 및 자산 이양 유도

4. '수산업경영인 제도' 청년·귀어인 친화적 재설계 (2단계 육성 생태계)

ㅇ 기본 방향 : 기존 '수산업경영인 제도'를 과감히 혁신

ㅇ 1단계 : '청년어업인 인큐베이팅 제도' 결합 (예비경영인 과정)

- 무모한 대출 권유 대신 2~3년간 임대 어선 및 정착지원금(3년간 월100만~110만 원) 제공
- 한수연 선배 경영인이 현장 멘토가 되어 어업 기술 전수 및 어촌계 안착 지원

ㅇ 2단계 : 수산업경영인 승격 및 지원 확대

- 평가 방식 개편 : 자산·경력 위주에서 정착 의지, 창업 계획, 교육 이수 실적 중심으로 전환 및 만 40세 미만 청년 의무 할당(30~40% 수준)
- 경영 안전망 제공 : 정착지원금 지급, 경영인자금 대출금리 1.0% 이하 인하, 어선·양식장 청년 임대사업 우선 대상자 자동 지정

5. 지속가능한 어촌을 위한 정책제언

ㅇ 법령 및 지침 개정 : 「후계청년농어업인법」 및 해수부 시행지침 개정으로 '청년수산업경영인' 정의 명시, 청년 전용 트랙 신설 및 패키지 지원 법적 근거 마련

ㅇ 포용 거버넌스 구축 및 예산 지원: 한수연의 청년 통합 육성·멘토링에 대한 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및 민관 합동 '청년어업인 정책협의체' 상설화

ㅇ 어촌계 진입 요건 완화 및 인프라 확충 : 청년수산업경영인 수용/가입 조건 완화 어촌계에 가점 및 예산 인센티브 부여

6. 결론

ㅇ 어촌 초고령화·소멸 극복은 단순히 인구를 유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존 어업인의 노하우와 청년·귀어인의 패기가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상생 생태계를 만들 때 완성됨

ㅇ 화려한 보고서 속 미사여구가 아닌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경영 안전망과 맞춤형 지원 정책 시급

ㅇ 한수연이 청년·귀어귀촌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며, 국회와 정부의 실질적인 입법 및 파격적인 예산 지원 촉구

수협의 경쟁력 강화, 조합원 가입대상 확대부터 접근

한국수산회 수산정책연구소 부소장
임 종 선

농어업의 주요 현안 및 정책 방향 논의를 위해 포럼을 개최해 주신 주철현 의원님과 수협·농협에 감사드립니다. 앞서 수협중앙회 박지훈 박사님이 발표해 주신 수협 조합원 감소 대응 방향은 현재 어업, 어촌이 당면한 상황에 매우 시의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수협 조합원은 저출산 및 고령화의 영향으로 최근 10년간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전체 인구 감소 영향 등의 인구구조 변화 추세도 반영되고 있지만, 그것과 비교해 보더라도 수협 조합원의 감소 추세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수협 조합원은 우리나라 어업경제 및 어촌유지의 근간이자, 인적자산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국내 어가인구는 2010년 대비 2024년에 51% 감소하고 있으며, 60세 이상의 고령 어가인구는 2010년 34.3%에서 2024년 67.0%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 감소 및 어업인 고령화 추세는 수협 조합원의 감소 경향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결국 수협의 조합원 감소는 역량 악화로 이어져 수협의 조직 독립성까지 훼손시킬 수 있는 문제로 대두되는 실정입니다.

그 동안 수협은 조합원 정비 사업을 통해 조합원 요건을 관리해 왔지만, 이제는 신규 가입을 촉진하고 자산 감소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수협법 제29조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조합원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의 가입을 거절하거나 불리한 가입 조건 달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어업인 자격을 가진자의 조합원 가입 자유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수협 조합원 자격제도는 진입 장벽을 낮추고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대한 몇가지 방향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수협 조합원 자격을 현재의 어업인 자격과 일치시키는 접근 방법이 필요합니다. 현재 어업인의 자격조건은 어업·양식업 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양식업에 종사하는 자, 영어조합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에 1년 이상 계속 고용된 자입니다. 그러나 지구별수협 조합원 자격(수협법 제20조제1항)은 지구별수협의

구역에 주소 ·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어업인으로서 60일 이상 어업을 경영하거나 종사하는 자입니다. 따라사 실질적인 어업인이면 수협 조합원에 가입할 수 있도록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연중 60일 이상 어업양식업에 종사하는 자까지 조합원 가입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어업인의 자격 기준과 수협 조합원의 자격요건에 대한 법적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수협 조합원 자격을 기존 생산자 중심에서 가공·유통 등 수산관련산업 전반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지구별수협 및 업종별수협은 생산자 중심이며, 수산물가공수협은 가공업자 중심입니다. 이제 우리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치사슬 전반을 아우르는 확대가 필요합니다. 현재 지구별수협의 조합원 자격을 현행 지구별수협의 구역에 주소 · 거소(居所) 또는 사업장이 있는 어업인에서 수산인으로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정의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어획물운반업자, 수산물가공업자, 수산물유통업자를 포용함으로서, 수협은 생산자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수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조직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수협 조합원 자격확대를 기회로 삼아, 수협이 미래 수산업을 견인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셋째, 예비 어업인인 청년, 귀어인 등에 대한 수협 조합원 단계별 진입 구조의 마련이 필요합니다. 어촌 소멸 위기 및 고령화 증가 등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 수협 조합원이 될 청년, 귀어인 등 예비 어업인을 수협 조합원으로 진입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 마련되어야 합니다. 현재 어업인으로서 조합원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있지만, 귀어 교육 이수자 및 어촌계 준계원 등 어업활동 의지가 분명한 이들에게 우선 수협 준조합원으로 유입하여야 합니다. 이후 어업인 기준을 충족하거나 일정 기간동안 수협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 신규 조합원으로 전환할 수 단계별 진입구조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넷째, 수협 조합원 자격의 검증할 수 있는 공적문서 중심의 전환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현재 어업인 자격은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지방해양수산청에서 발급하고 있어 공신력 확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어업종사자확인서(지구별수협 정관예 제14조)는 어촌계장 및 수협조합장이 발급하고 있으므로 수협조합장의 발급으로 전환 추진하되 고용계약서,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 가입 서류 등의 증빙자료를 필수적으로 제출토록 강화하여야 합니다. 특히 수협 조합원 자격을 수산인으로 확대하는 경우에 국세청 업종코드 및 품목 등의 주요업종코드가 기재된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도록 하여 무자격조합원에 대한 문제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

가 있습니다.

수협 조합원 감소의 대응방향은 조합원 자격 확대와 더불어 자격 확인 절차 강화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수협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아가 최근 K-seafood 수출 호조세를 발판삼아 역량을 강화하고, 더불어 수협의 미래 가치를 확대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가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토론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장
도 윤 정

초고령화와 인구감소는 농어촌이 공통적으로 직면한 구조적 문제이다. 어촌은 고령화와 기후변화, 어업생산성 저하 등의 영향으로 어려움이 커지고 있으며, 신규 인력의 어촌 유입과 안정적인 정착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농촌 역시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생산성이 저하되고 유휴자산이 증가하는 한편, 도농 간 생활·정주 여건의 격차도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수협과 농협의 존립 기반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어촌에 한정하여 살펴보면 어가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어업인의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수협 조합원 감소는 일정 부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특히 수협 조합원의 고령화율(60세기준)은 2025년 기준 75.3%에 이르고 있어 향후 고령 조합원의 어업활동 중단 등에 따른 조합원 감소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 조합원수(천 명) : (‘18)158 → (’20) 154 → (‘22) 153 → (’24) 150 → (‘25)148

따라서 최근 수협이 직면한 조합원 감소 문제는 단순히 조합원 수를 늘리는 차원이 아니라, 새로운 어업인의 유입과 안정적인 정착을 통해 수협의 조합원 기반을 지속적으로 유지·확대하는 구조적·근원적 문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가장 근본적인 대응방안은 청년어업인과 귀어인 등 새로운 어업인력의 안정적인 유입과 정착을 지원하는 것이다. 청년어업인은 어선·양식장 구입 등 초기 자본 부담뿐 아니라 어촌계 가입, 어업권 확보, 기술 습득, 판로 개척 등 다양한 진입장벽에 직면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귀어 창업자금, 주택 지원, 청년어업인 영어정착금 지원, 양식장·어선임대, 체험형 귀어프로그램 등의 정책을 추진하여 어촌 신규인력 유입과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나아가 단순한 어촌으로의 유입 확대를 넘어 실제 수산업에 종사하면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도 뒷받침 되어야 하는 바, 청년어업인이 정착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정책을 발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처럼 새롭게 유입된 어업인이 수협 조합원으로 안정적이게 편입되기 위해서는 수협법상 조합원 자격*과 어업인의 범위를 변화하는 어업 환경에 맞춰 합리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수협 조합원의 현행 자격요건이 어촌에 신규로 유입된 청년어업인과 귀어인에게 진

입장벽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닌지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 지구별수협의 구역에 주소·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어업인으로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

물론 조합원 범위의 확대는 수협이 어업인을 중심으로 구성된 협동조직이라는 정체성과 직결되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조합원 자격 개선 역시 단순히 조합원 숫자를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수협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조합원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점검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

또한, 수협 조합원 감소는 수협만의 문제가 아니라 농어촌의 인구감소와 고령화라는 공통된 문제인 만큼, 수협과 농협 간 청년 농어업인 육성 및 조합원 기반 유지 사례를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두 기관의 운영여건을 비교·검토하면서 여러 대책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ㅍ

오늘 포럼은 단순히 수협(농협) 운영의 안정적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감소하는 수협 조합원 수를 늘리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유입된 어업인이 어촌에 정착하고 안정적으로 수협 조합원, 즉 어촌의 일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지 전반적인 정책을 검토하는 자리이다. 각 단계마다 놓치는 부분은 없는지,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것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 포인트 정책들을 발굴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청년어업인과 귀어인의 안정적인 정책을 지원하고, 조합원 자격제도의 적합성을 점검하며, 수협과 관계기관의 협력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수협의 조합원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